

2008 집회시위를 통해 본 시민사회 프로젝트(II)

민주화 이후 한국의 집회시위와 민주주의

주제1. 민주화 이후 항의의 정치 : 전개양상과 개선방향

주제2. 2008년 촛불시위와 한국 민주주의 : 촛불시위의 전개과정과 함의

[부록] 본문 그림의 데이터 표 모음

프로젝트 개요

본 프로젝트는 2004년부터 하버드대학의 제고르즈 에키트 교수 · 럿거스 대학의 앤 큐빅교수, 한국의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이숙중 성대 교수)이 주축이 되어 진행해온 “신생민주국가에서의 쟁론적 정치(The Logic of Civil Society: Contentious Politics in New Democracies)”라는 국제 데이터뱅크 구축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이는 학술연구 프로젝트임과 동시에 민주주의 역사가 짧은 나라들에서 질적으로 성숙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정책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는 실천적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국제공동연구팀은 민주화 과정에서 집단행동의 전통이 강한 동아시아 2개국(한국·대만), 동유럽 2개국(폴란드·헝가리)을 선정하여 민주화 이후 신문지면에 등장한 집단행동(주로 집회와 시위)의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정리하고 정기적으로 자료갱신을 하고 있다. 각 나라의 데이터베이스는 에키트·큐빅교수팀이 개발한 동일한 자료정리기준에 따라 수집되어 매우 체계적이고 가치 있는 경험적 데이터로 평가 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4년부터 2년에 걸쳐 1987년~2003년까지 4개 언론매체(중앙일보·한겨레신문·월간조선·시사저널)에 소개된 항의사건 보도 기사를 『한국 항의사건데이터베이스(PEDAK:Portest Event Data Achive Korea)』에 정리했다. 총 6800여건의 데이터 중 1989년 이후에 발생한 5400여건을 추려 사건분석기법(event analysis)으로 분석한 결과를 중앙일보 지면을 통해 소개했고 당시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1989년 이후 시위 5400여건 분석, 중앙일보 2006년 6월 29일자).

2008년 들어와 동아시아연구원은 2004년~2007년까지 보도기사 881건을 추가로 조사함으로써 1988년 노태우 정권부터~2007년 노무현 정권까지의 20년간을 아우르는 보다 완결적인 데이터베이스로 갱신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누적 총 데이터 사례는 7740건이며 이중 1988년 이후에 발생한 7431건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정권별로 비교 분석이 가능해지고, 2004년 탄핵시위를 포함하여 노무현 정부 말기에 전개된 다양한 시위방식에 대한 데이터 분석도 가능해졌다. 향후 이명박 정부 시기 집회시위 보도 기사의 자료조사도 정기적으로 갱신해나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팀은 2007년까지 자료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2008년 촛불집회에 대한 자료조사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예정된 조사시점이 아닐 뿐 아니라 1년도 채 안

되는 단기 시위에 대한 분석이 갖는 한계가 명확하지만 촛불집회가 한국민주주의와 거버넌스 논의에 미치고 있는 학술적, 정치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시범연구 차원에서 분석할 필요와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2008년 촛불집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현상에 주목하면서 촛불집회를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집단지성의 출현' 혹은 '직접민주주의의 구현'으로 보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대의제의 위기로부터 비롯된 일시적 일탈현상'으로 보는 입장이 이에 대립하고 있다. 한편 '정치적 불순세력에 의해 동원된 결과'라는 논평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파퓰리즘적 여론몰이'라는 해석도 존재한다. 이론적 흥미 차원을 넘어 정치적·이념적 혼란의 근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촛불집회에 대한 논의는 경험적 자료와 객관적 분석에 근거하기 보다는 자의적이고 직관적인 해석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팀의 실증적 분석이 논의의 혼란을 완화시키고 객관적이고 생산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연구방법론의 차원에서는 국제연구팀이 마련한 기존의 공동 자료정리기준의 재조정 작업을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으로 판단했다. 에리트·큐빅교수의 분석틀은 1990년대 말에 마련된 틀로서 이후 각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집단항의의 새로운 현상들을 포착하기 위해 매년 회의를 통해 수정보완작업을 하고 있다. 2008년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인터넷을 활용한 쌍방향적 시위문화와 무정형의 집회조직 방식 등은 기존의 틀로서 포착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하였다. 2008년 촛불시위를 포함한 6개월 데이터 조사를 시범적으로 진행하여 얻은 결과는 촛불집회의 특징과 의미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동시에 4개국 공동연구의 분석틀을 수정 보완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하게 될 것이다.

제2차 연구 : 2004년 ~ 2007년까지 한국 시위보도 분석

- 연구기간 : 2008년 1월~ 2008년 7월
- 연구기획 : EAI, Center for European Studies in Harvard University
- 후 원 : 중앙일보
- ※ 시범분석자료 : 2008년 1월~6월(2008 촛불집회 보도자료 포함)

제1차 연구 : 1989년 ~ 2003년까지 한국 시위보도 분석

- 연구기간 : 2003년 9월~ 2005년 12월
- 연구기획 : EAI, Center for European Studies in Harvard University
- 후 원 : 중앙일보,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팀

◎ 동아시아연구원 연구팀

- 위원장 : 김선혁(EAI 민주주의센터 소장,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 연구원 : 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 정원철(피오리서치 연구기획실장)
- 간 사 : 신영환(EAI 외교안보센터 연구원)
- 자료입력팀 : 조성은(고려대 행정학 박사), 이은선(고려대 행정학과 석사과정), 윤선영(고려대 정외과 박사과정), 박혜민(고려대 정외과 학부생)

◎ 국제공동연구팀

- 한 국 : 김선혁 (EAI 민주주의센터 소장,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대 만 : Yun-han Chu (National Taiwan Univ), Chin-en Wu (Academia Sinica)
- 폴란드 : Grzegorz Ekiert (Harvard Univ), Jan Kubik (Rutgers Univ)
- 헝가리 : Bela Greskovits (Central European Univ), Jason Wittenberg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민주화 이후 한국의 집회시위와 민주주의

김선혁 (EAI 민주주의연구센터 소장·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정치가 ‘생물’이라고들 하는데 집회시위 역시 생물이다. 한국의 집회시위는 전문가들마저 당혹케 하는 속도로 진화를 계속하고 있다. 2008년 촛불시위는 주체도, 지도부도, 구심정도, 일정한 형식이나 의제도 없고 분명한 종결도 예정되어 있지 않은 역사적 실험이다. 당연히 해석이 분분하다. 다양한 정치세력이 촛불시위를 아전인수격으로 활용하고자 했으나 배척당했다. 이제 한국 민주주의에서 집회시위는 일상화, 대중화, 보편화되었다. 집회시위는 희생을 각오하고 떠나는 전장이 아니라 시민의 의견과 이익과 열정을 표출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었다.

이번 EAI 연구결과는 민주화 이후에 한국에서 집회시위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재확인해 주고 있다. 한국정치에서 집회시위가 차지하는 위치는 남다르다. 대중동원은 한국에서 권위주의의 해체와 민주주의로의 이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대규모 집회시위의 경험이 ‘추억’이 되어버린 많은 신생민주주의국가들과 달리 한국에서 대중동원의 신화는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현재형이다.

하지만 집회시위의 양태와 방식에 의미심장한 변화도 관찰되고 있다. 거리시위가 늘고, 시위의 주체가 변하고, 제도정치에서의 불평등은 비정상적 시위정치에도 재생산된다. 정치적 성격의 대정부시위가 계속되고, 대규모·장기·불법시위가 유효하다는 것이 ‘근거있는’ 속설이며, 조정과 협상은 여전히 부족하다.

집회시위로 초래되는 경제적 피해를 강조하여 ‘시위공화국’을 꾸며내는 ‘집회시위 무용론’은 이제 설득력을 잃었다. 열악한 경제상황에서도 집회시위에 대한 여론은 별로 나쁘지 않다. 집회시위는 이제 한국 민주주의에서 제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상수적 현실이다. 하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은 극명하게 갈린다. 집회시위를 제도권 대의정치로 수렴되어야 할 기형적 현상으로 보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역동적인 에너지를 가진 변혁의 장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 전자는 ‘정당정치의 조속한 복원’을 촉구하며, 후자는 대의민주주의와 ‘거리민주주의’의 ‘이중권력’을 꿈꾼다.

아마도 한국 민주주의에서 집회시위의 진정한 가치는 이러한 과소평가와 과대평가의 사이 어디엔가 자리잡고 있을 것이다. 집회시위가 정당정치를 대체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제도정치의 정상화만을 교과서적으로 되뇌기엔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이 너무 절박하고 집회시위가 가진 역사적 무게가 버겁다. 끊임없이 진화하고 자기혁신하는 한국의 집회시위를 백안시하거나 이상화하기보다는 겸허한 자세로 성찰하고 시민사회의 열정을 제도화하여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욱 알차게 일구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

주제1. 민주화 이후 항의의 정치 : 특징과 개선방향

정한울(EAI) · 정원철(피오리서치)

1. 민주화 이후 집회 시위 어떻게 달라졌나? 민주화 20년 시위양태의 변화

(1) 건수와 거리시위 비중 : 집회건수는 줄었지만 거리시위 비중이 높아져

- 1997-8년 IMF 거치며 증가하다 노무현 정부 하에서 다시 감소. 2007년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서
- 집회시위 중 거리시위가 차지하는 비중 커져 : 촛불시위 등 일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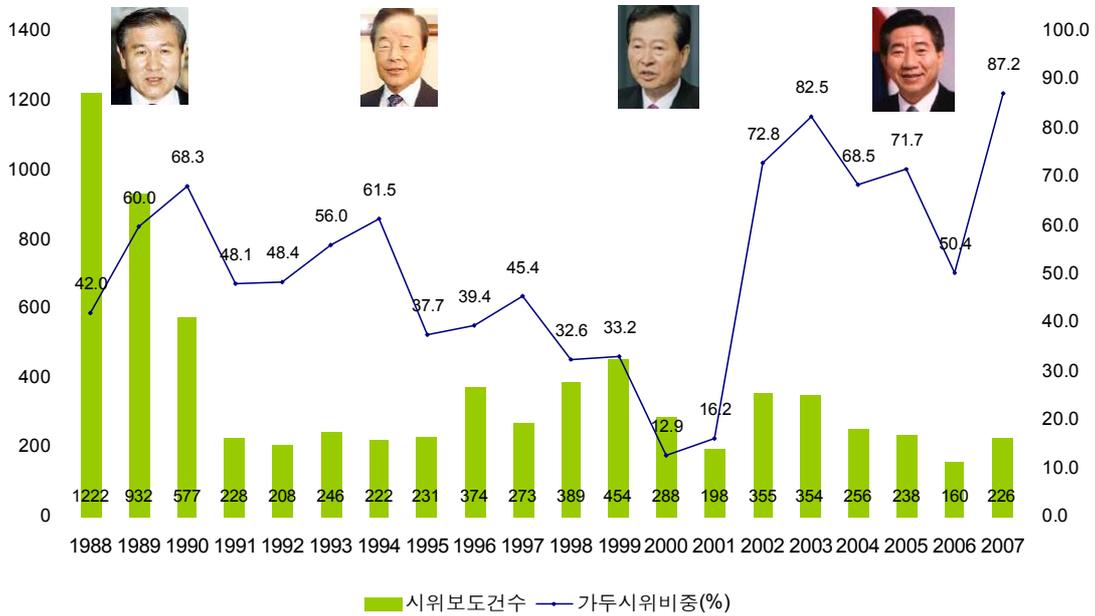
1987년 민주화 이후 언론에 보도되는 시위건수는 줄고 있지만 그 중 가두시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 대 말까지 집회시위 관련보도가 집중되고 있다. 동아시아연구원(원장 이숙중 성균관대 교수)이 1988년부터 2007년까지 중앙일보 · 한겨레신문 · 주간조선 · 시사저널에 실린 시위보도 7,431건을 분석한 결과다.

1980년대 후반에 집회시위 보도가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문민정부 초기에는 급격히 시위관련 보도가 줄었다. 그러나 1996년부터 IMF 사태가 발생한 1990년 대 후반 다소 늘어나는 추세다. 노동법개정에 반발한 노동계의 총파업과 IMF 당시 대량 해고 사태가 시위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대통령 취임이후 시위건수가 차츰 줄다 시위건수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돌아섰고 노무현 정부가 등장한 이후에는 탄핵을 기점으로 다시 수그러드는 양상이다.[그림1]

민주화 초기인 노태우,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집회시위 중 가두시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슈에 따라 늘고 줄고를 반복하지만,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꾸준하게 가두시위 비중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추세가 반전된 것은 2002년. 여중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전개된 각종 시위와 12월의 촛불집회로 인해 2002년에는 언론에 보도된 집회시위 중에서 거리행진이나 가두집회의 비중이 72.8%에 달했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시위 중에서 가두집회나 가두시위가 차지한 비율이 평균 75.2%에 달한다. 그 후 다시 하락하다 2007년에는 80년대 말부터 90년 대 초반 민주화 초기 다양한 이해관계 표출되던 노태우, 김영삼 정부 시기에도 50%대를 오락가락 했을 뿐이다.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가두시위 비율이 1998년, 1999년에 32.6%, 33.2% 정도였고, 2000년 2001년에는 12.9%, 16.2%에 그쳤다.[그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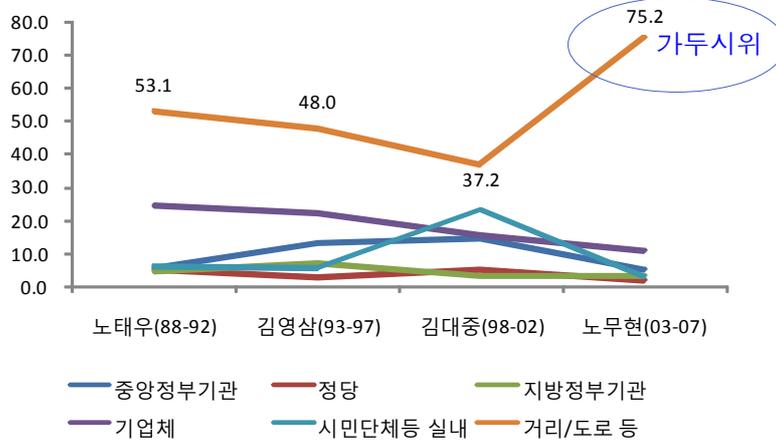
노무현 정부시기 가두집회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은 2002년 사망한 여중생을 추모하는 첫 대규모 촛불 집회 이후 대규모 촛불시위나 가두집회가 일상화된 결과로 보인다. 2003년 이라크 파병 반대시위, 2004년 대통령탄핵 반대시위, 2006년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 등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 마다 대규모 가두집회 및 촛불집회가 등장하였다. 심지어 2005년 북한인권을 촉구하는 보수진영의 집회에서도 촛불은 어김없이 등장했다.

[그림1] 1988~2007 시위보도 건수 및 거리시위 비율(case=7431/5529)



주1: 1988년은 한겨레신문 창간 이전 시점으로 중앙일보 및 월간조선에 실린 보도분석 결과이다.

[그림2] 정권별 시위장소 분포 변화(% , 1988~2007, case=5529)



(2) 시위 주체 및 목적의 변화

- 화이트칼라가 주도하는 시위비중이 가장 높아
- 사회적 약자 층이나 사양산업(농축산/수/어업) 종사자 시위 비중 낮아져 향의의 정치에서도 소외되는 현상
- 80년대 운동의 주력군, 청년학생 주도 정치시위 비중 급감

(1) 시위주도층의 변화(1988-2007)

• 민주화 이후 집회시위, 벵타이 부대 · 생산직 노동자가 시위 주도

1988년~2007년까지 집회시위 6553건을 분석한 결과 화이트칼라로 불리는 사무관리직 시위 비율이 25.1%로 가장 많았고, 생산직 근로자 주도의 시위가 22.9%로서 노동자들이 민주화 이후 집회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그 뒤를 청년학생(20.4%), 지역주민 및 소비자(12.8%)가 잇고 있다. [그림3]

시기별로 봐도 화이트칼라 노동계층이 주도한 시위가 22~28%대로 꾸준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생산직 노동자의 시위는 김대중 정부 시기에 37.8%로 급상승한 경우를 제외하면 다른 정부에서는 16~21%에 머물렀다. IMF직후 대량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이들 계층의 시위가 급증한 결과로 보인다. 민주화를 주도했던 청년학생 계층의 경우 전체 종합결과로는 20.4%로 여전히 높은 순위에 올라 있지만 최근 그 영향력은 급격하게 상실하고 있다.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시기 각각 이들이 참여한 시위가 전체 31.5%, 21.4%에 달했지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9.6%, 9.3%에 그쳤다.

대신 공공부문 종사자(공무원, 군경, 공기업 종사자)나 장애인 · 여성 · 외국인노동자 등 소수자를 대변하는 시위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노태우 정부시기 각각 3.2%, 2.6%에 불과했던 공공부문 집회나 소수자 집회가 노무현 정부 시기를 거치면서 둘다 8.2%대로 상승했다. 전체 평균을 보면 공공부문 종사자 집회가 5.6%, 장애인 · 여성 ·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5.1%에 불과했다. 한국에서 사냥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농축산업 · 어업 종사자들이 주도한 집회건수도 4.8%에 그쳤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 들어와서는 3.3%로 내려갔다.[그림4]

• 선진민주주의의 정치참여의 딜레마 : Unequal Vo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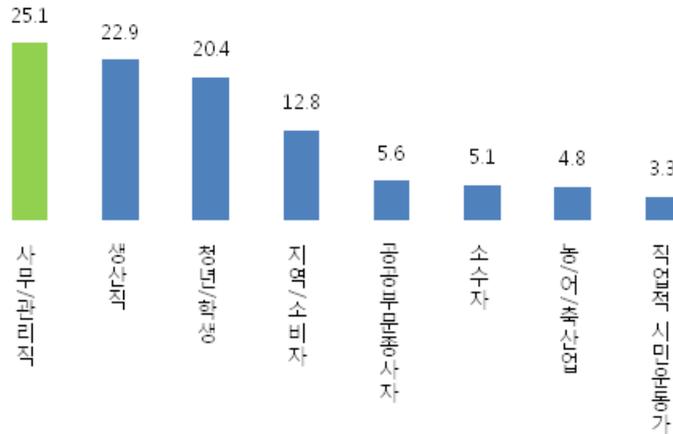
정치적 능력 갖춘 고학력 층이 시위를 주도, 소외계층은 시위에서도 소외

이러한 패턴은 한국 고유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서구 선진 민주주의 나라들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다.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가 정부나 의회에서 제대로 대표되지 못하는 소위 '대의제의 위기'가 확산되면서 시위가 같은 비전통적 방식의 정치참여가 줄지 않을 뿐 아니라 교육수준이 높고 정치적으로 각성되어 있는 중산층과 인텔리층이 시위를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딜레마는 집회시위와 같은 비제도권 정치에서조차 중산층이나 인텔리 층이 주도할 때 정작 사회적 약자 계층/소수자 이익이 과소 대표된다는 점이다(APSA Task Force Report 2004; Russel J. Dalton 1996). 중산층이나 인텔리 층은 제도정치(정당 · 이익단체 · 선거) 영역에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실현할 수 있는 능력과 여유를 보유하고 있지만, 낮은 교육수준의 하위계층이나 소외계층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할 수단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 집회시위조차 불균등한 목소리를 갖게 될 때 정작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소외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가질 시점이다. 한국 역시 이러한 딜레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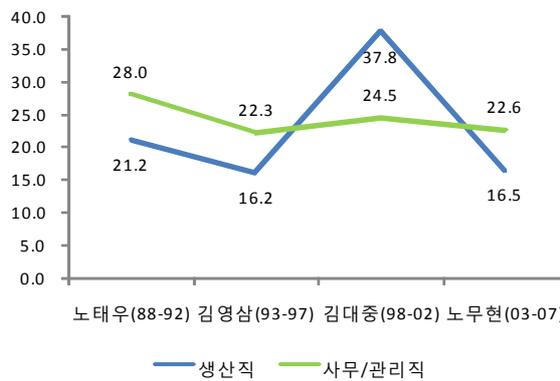
[그림3] 1988년 ~2007년 집회시위 주요 참가자의 직업 분포(% , response=65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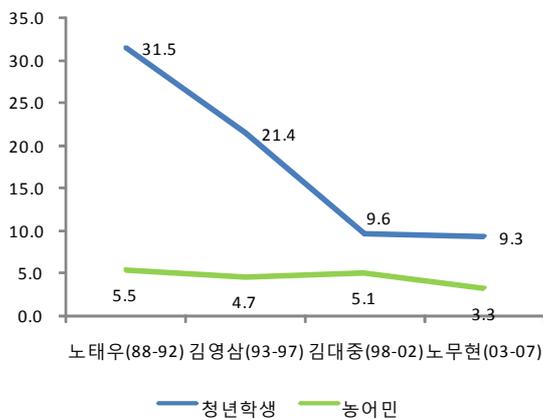
주1: 직업적 시민운동가는 2004년부터 조사 결과
 주2: 다중응답분석(multiple response analysis), response 기준 분석
 주3: 자료없음 case는 제외

[그림4] 정권별 시위주도층 구성 변화(%) (1988~2007, response=65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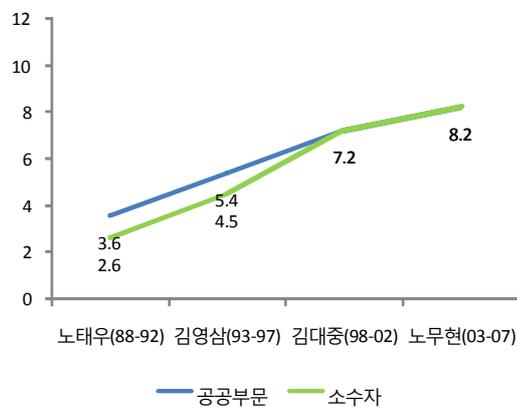
사무직/관리직 시위 꾸준, 생산직 시위 줄고



80년대 시위 주역은 지고



공공부문, 소수자 운동은 기지개



주1: 다중응답분석(multiple response analysis), response 기준 분석
 주2: 자료없음 case는 제외한 시위건수 중 차지하는 비율

(2) 무엇을 위해 누구를 대상으로 싸웠나?

- 노동조합 : 물질적 보상 목적으로 한 이익단체 성격 강화, 경제이슈 시위(물질적 보상 경제적 문책) 42%로 가장 높아
- 전문직단체 · 학생 : 80~90%가 정치 이슈 관련 시위(정책 반대 · 정치적 책임 요구)
- 지역운동단체 : 71.4%가 정치이슈 시위, 23%가 경제이슈

정치적 시위 58.5%, 경제적 시위 41.5%

1988년부터~2007년까지 진행된 시위의 성격은 역시 정치투쟁 성격이 강했다. 분석대상인 2,467건 중 58.5%가 특정 정책에 반대하거나 특정 정치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의 정치이슈와 관련된 것이었다. 나머지 41.5%가 물질적 보상이나 일반적인 경제적 요구, 경제정책 수정요구, 경제정책 실패 책임 문책요구(사퇴) 등 경제이슈였다.[표1, 그림5]

화이트칼라 전문직 단체가 정치투쟁 이끈다

시위의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화이트칼라층의 전문직 단체들은 경제적 문제보다 정치적 이슈로 집회시위를 이끌고 있다. 특정 정치인의 사퇴 등 정치적 책임을 묻는 시위가 47.6%, 정책적 차원의 항의시위가 그 다음이었다(42.4%).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거나 특정 경제정책의 변화, 일반적인 경제이슈를 위한 시위는 다 합쳐도 10%에 못 미친다. 청년 · 학생단체나 지역운동단체의 경우도 전문직 단체와 동일한 패턴을 보여준다. 정치이슈 관련 시위가 많고 압도적으로 많고, 경제이슈 관련 시위와는 별로 인연이 없다. 청년 · 학생단체의 경우 경제이슈 관련 시위가 19.0%였고, 지역운동 단체의 경우 28.6%에 불과하다. 이들 단체들의 경우 정치적 편향의 문제가 제기된다. 구성원들의 생활 · 경제적 이익 실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조의 이익단체화 강화, 54.5%가 경제적 목적의 시위. 정치시위 비중도 적지 않아

한편 80-90년대 정치투쟁을 이끌었던 노동조합은 이제 상당부분 이익단체로서의 성격이 강해졌다. 이들이 주도한 시위가 내건 요구를 분류해보면 물질적 보상 요구가 29.5%로 가장 높고, 경제정책 변화나 경제정책 결정의 책임을 요구하는 건수가 12.2%, 일반적인 경제적 차원의 요구가 12.8%로 경제이슈가 절반(54.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정치적 정책에 대해 반대(23.3%)하거나 그 정치적 책임을 요구(22.3%)하는 등의 정치적 시위는 45.6%로 여전히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주 타겟, 기업대상 시위가 뒤를 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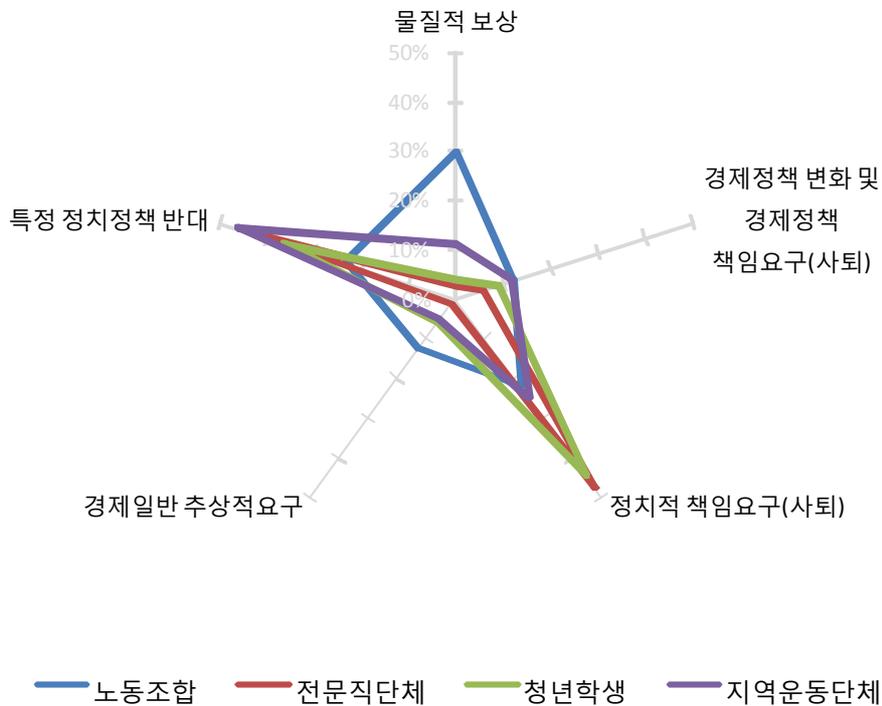
정치투쟁 우위가 유지되면서 시위의 대상도 주로 정부나 정치권(국회)/지방정부에 집중된다. 2007년 한 해만 보더라도 정부를 타겟으로 한 시위가 30.1%였고, 국회나 정당을 대상으로 한 시위가 17.4%였다. 한편 IMF이후 크게 급증했던 기업을 타겟으로 한 시위 비율은 2000년대 들어와 줄어들었다. 그러나 2005년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07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위는 전체 6207건 중 13.1%로 정부와 정치권의 뒤를 이었다.[그림6]

[표1] 시위 주요단체별 시위요구 특징(빈도/%)

빈도	물질적 보상	경제정책 변화 및 경제정책 책임 요구	정치적 책임 요구(사퇴)	경제 일반/추상적 요구	특정 정치적 정책 반대	총계
노동조합	476	196	359	206	376	1613
전문직단체	9	19	156	5	139	328
청년학생	16	36	179	24	145	400
지역운동단체	14	15	32	7	58	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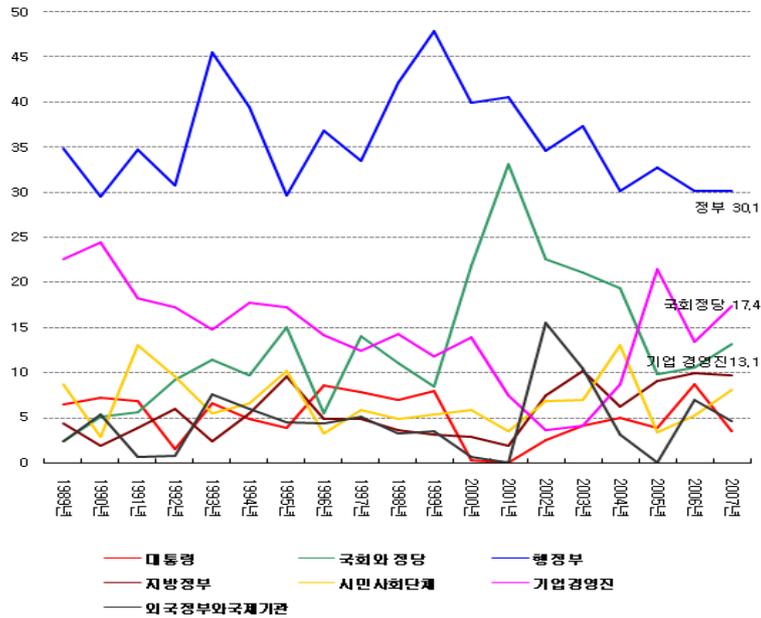
백분율	물질적 보상	경제정책 변화 및 경제정책 책임 요구	정치적 책임 요구(사퇴)	경제 일반/추상적 요구	특정 정치적 정책 반대	총계
노동조합	29.5	12.2	22.3	12.8	23.3	
전문직단체	2.7	5.8	47.6	1.5	42.4	
청년학생	4.0	9.0	44.8	6.0	36.3	
지역운동단체	11.1	11.9	25.4	5.6	46.0	

[그림5] 1989년 ~2007년 집회시위 주요 주도/참여 단체별 요구사항(case=2467)



주1: 다중응답분석(multiple response analysis), response 기준
 주2: 자료없음 case는 제외
 주3: 각 수치는 아래 표(백분율) 의미

[그림6] 1989 ~2007 집회시위 대상 비율 추이(% , case=6207)



2. 민주화 20년,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를 위한 제언

- [시위 3대속설] 요구수용 = 시위규모 × 시위기간 × 시위강도(불법시위)
- 많이 모이고, 오래 싸우고, 불법 시위일수록 수용을 높여져, 갈등의 사회적 비용 높여

거칠게 많이 오래 외쳐야 요구 관철한다는 속설

20년간 시위보도를 분석해보면 시위와 관련한 3대 속설이 그대로 적용된다. 많이 모여 목소리 거칠게 오래 외쳐야 요구 관철 가능성이 높다는 것.[그림7],[그림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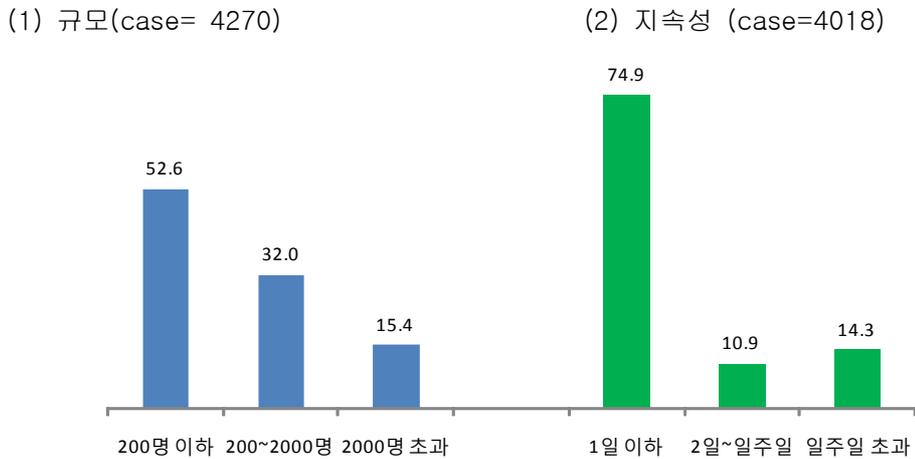
우선 시위 규모를 살펴보면 조사 사례 중 200명 이하가 참석하는 소규모 집회가 52.6%, 200명~2000명 규모의 중간규모 시위가 32.0%, 2000명 이상이 모이는 큰 시위는 15.4%에 불과하다. 그만큼 사람 모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효과는 생각보다 크다. 지난 20년 간 200명 미만이 참여한 집회의 요구가 실현된 비율은 27.6%, 200~2000명 규모일 때 37.6%지만 2000명 이상이 모일 때는 41.3%까지 상승한다.

시위기간이 길수록 요구수용률이 높아진다. 시위의 지속기간을 보면 1일 이내 집회가 74.9%가 주를 이루고 있다. 2일~일주일간 지속되는 집회는 전체 4018건의 시위 중 10.9%에 불과하다. 일주일을 초과하는 장기시위도 14.3%로 나타났다. 오랫동안 사람들의 관심을 잡아두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주최 측에서 장기 시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그만큼 요구를 관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일 미만 단기 시위에서 요구가 수용된 것으로 보고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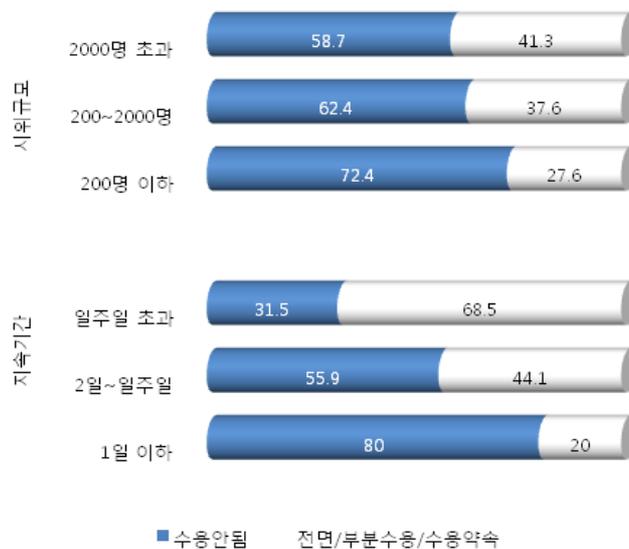
사례는 20%에 불과하지만 일주일간 끌면 44.1%로 두 배이상 높아진다. 일주일을 초과하는 장기시위에는 68.5%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장기시위와 대규모 시위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일주일을 초과하는 장기시위의 경우 노태우 정부시기 14.1%에서 첫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부시기 25.6%까지 상승한다. 그러나 IMF 이후 장기시위에 눈총이 따가워져 김대중 정부시기에는 장기시위가 4.7%에 불과했지만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15.9%로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2000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시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노태우 정권 시기 11.9%, 김영삼 정부시기에는 15.5%에 머물렀지만, 김대중 정부시기에는 21.5%, 노무현 정부시기에는 20.6%로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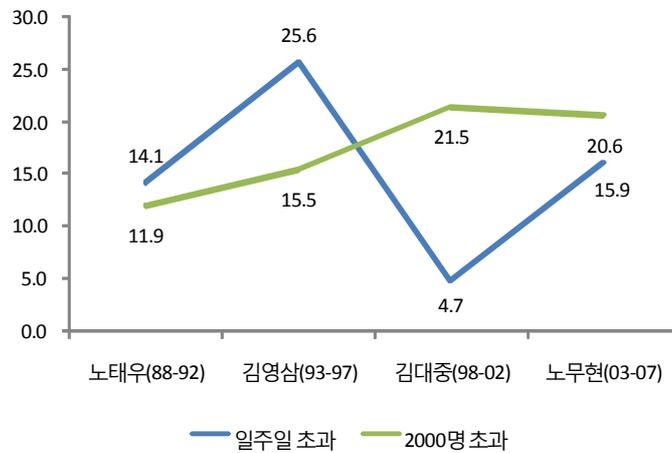
[그림7] 규모와 지속성(1988~2007, %)



[그림8] 규모와 지속기간에 따른 요구 수용률 차이(1988~2007)
(%, 규모 = 1196, 지속기간 case= 1439)



[그림9] 2000명 이상, 일주일 초과 시위 비중 변화
(%, 규모 case=4018, 지속기간 case=4270)



- 불법시위가 더 잘 통한다는 속설
- 합법시위의 인센티브에 대해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

불법 시위의 경우 법질서를 교란하고 다른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이러한 사회적 압력 때문에 노태우 정부 때 불법시위 비중이 43.5%를 기록한 이래 김영삼 정부 시기 21.2%, 김대중 정부시기에는 14.9%까지 떨어진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시기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서 22.7%까지 상승하게 된다.[그림10]

• 김대중 정부 불법시위에 대해 가장 강경, 노무현 정부 가장 유화적

불법시위는 강경진압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로 인해 민주화 이후 각 정부는 강경진압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있다. 노태우 정권 시기 불법 여부를 막론하고 강경 진압한 비율은 24.1%다. 김영삼 정부시기에는 13.1%였고, 김대중 정부(10.6%)와 노무현 정부(10.3%)가 강경진압으로 대응한 비율이 가장 낮은 편이다.[그림11]

그러나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대처방식에서는 달랐다. 민주화 직후 노태우 정권은 불법집회에 대해서 강경 진압한 비율이 55.8%였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는 67.4%에서 71.1%로까지 높아진다. 두 정부에서는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를 한 셈이다. 한편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불법시위에 대한 강경개입 비율이 35.6%로 크게 떨어진다. 노무현 정부에서 불법시위가 용인되었다는 비판에 무게를 실어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불법시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주문하기에 앞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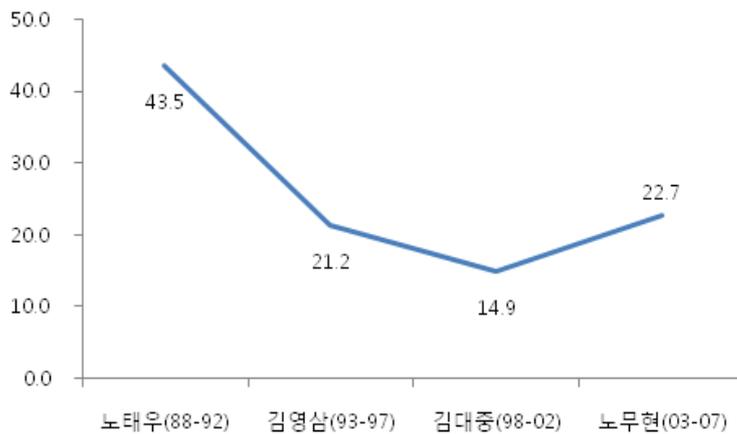
• 불법시위가 더 잘 통한다는 믿음의 문제

합법시위 문화가 정착되기 힘든 요인 중의 하나는 불법을 불사하며 큰 목소리를 내야 요구를 관철할 수 있다는 믿음에 있다. 실제로 지난 20년간 1425건의 시위보도를 분석해보면, 합법시위에서 요구가 관철될 확률은 28.2%에 불과하지만 불법시위의 경우 42.4%로 훨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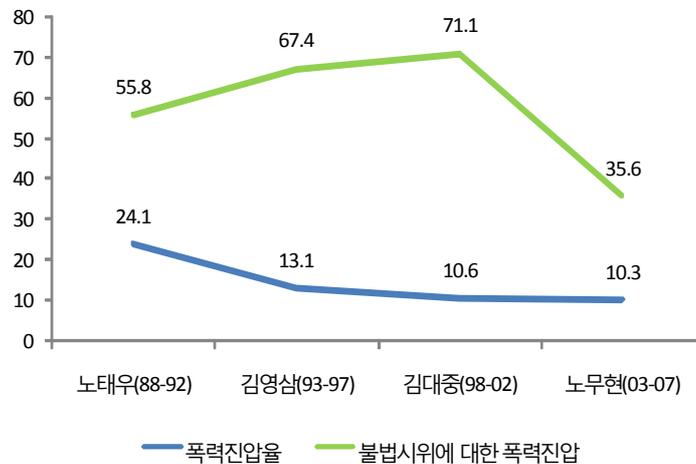
높다.[그림12][표2]

정권별로 보면 불법시위 건수가 가장 많았던 노태우 정권 시기에 불법시위의 요구관철 비율이 62.8%로 가장 높았다. 합법시위 요구가 관철된 비율이 33.5%에 그쳐 이 시기에는 불법시위를 해야 요구를 들어준다는 법칙이 생길 법 했다. 김영삼 정부시기에는 불법시위 시 요구실현률 35.0%, 합법시위 시 33.5%로 불법시위의 인센티브는 크게 줄어들었다. 김대중 정부시기에는 불법시위 요구실현 비율이 24.6%로 합법시위 시 요구실현 비율인 29.3%보다 낮아 합법시위의 매력이 커졌던 시점이다.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 불법시위의 요구관철 비율은 28.8%로 다른 정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합법시위의 요구관철 비율(21.9%)에 비해서는 잘 통했다고 할 수 있다. 불법시위의 인센티브가 유지되는 한 대응강도를 높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일시적으로 불법시위 회수를 줄이는 데는 기여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힘들다. 오히려 대응강도를 높이는 것보다 대응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합법시위의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림10] 정권별 불법시위 비중 변화(%)(1988-2007, case=5161)



[그림11] 정권별 전체 폭력진압율과 불법시위 폭력진압률 비교(%)



주1: 폭력진압률 case=5018, 불법시위 폭력진압률 case=3954

[그림12] 시위형태별 요구수용율의 차이(%) (1988-2007, case=1425)



주1 : 합법시위 (합법+불법이였다 합법), 불법시위(불법+합법이였지만 불법이였다)
 주2 : 1989~2007 데이터만 보면 합법시위시 요구수용 비율은 26.2%, 불법시위 시 요구 수용 비율은 31.2%로 격차가 줄어든다.

[표2] 정권별 시위형태별 요구수용도 비교(%) (1988-2007, case=1425)

정권분류 (case=2224)	시위방식	수용 안됨	전면/부분수용 및 수용약속
노태우(88-92)	합법시위	66.5	33.5
	불법시위	37.2	62.8
	소계	52.9	47.1
김영삼(93-97)	합법시위	66.5	33.5
	불법시위	65.0	35.0
	소계	66.1	33.9
김대중(98-02)	합법시위	70.7	29.3
	불법시위	75.4	24.6
	소계	72.6	27.4
노무현(03-07)	합법시위	78.1	21.9
	불법시위	71.2	28.8
	소계	75.9	24.1

- 타협과 갈등조정 문화가 절실하다
- 협상과 조정 시 요구 관철비율 80~90%, 최선 대신 차선의 지혜가 필요

불법시위로부터 초래되는 법질서의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응강도를 높이는 것 못지 않게 사회적 갈등과 이익의 충돌이 극단적인 거리의 정치로 돌변하기 전에 예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합법시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사회적 갈등과 이익의 충돌을

중재하고 타협시키는 제도와 문화를 시급히 구축하는 것이다. 민주화 과정 및 이후 한국사회는 이념적·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타협과 조정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 심지어 기회주의로 매도되기도 한다. 민주화 성년을 넘어선 한국사회에서 이제 협상과 갈등조정을 통해 성숙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시점이 되었다.

조사결과 지난 20년간 집회와 시위 과정에서 당사자간 협상이나 제3자에 의한 조정 시도는 매우 낮았지만 그 효과는 기대이상이다. 우선 보도된 시위 2375건 중 당사자간 협상이 이루어진 비율은 83%였고, 협상이 진행된 사례는 17%에 그쳤다. 조정시도를 하지 않은 건수는 무려 89.7%였고, 조정시도가 이루어진 경우는 10.3%였다. 협상의 경우 노태우 정부 시절에 30.5%에 달했던 것을 제외하면 이후 10.7%~14.0% 대에 머물렀다. 조정의 경우 노태우정부시절 14.9%였지만 김영삼, 김대중 정부로 들어오면서 10%에 못 미치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 다시 14.0%로 상승하고 있다. 절대적 수치로 보면 집단행동에 대한 협상과 조정의 관행이 거의 자리잡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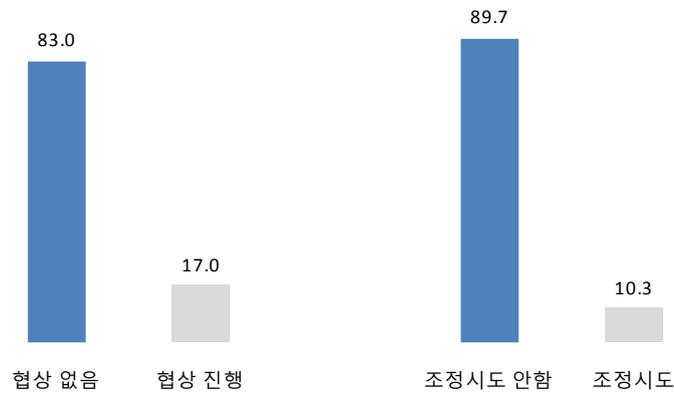
그러나 시위에 이해관계가 걸린 당사자 간 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시위의 요구안이 전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수용된 비율은 무려 92.7%(전면수용 35.5%, 부분수용 52.3%, 수용 약속 5.0%)에 달했고 전혀 수용되지 않은 경우는 7.3%였다. 반대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위 참가자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경우(전면수용 4.6%, 부분수용 8.5%, 수용 약속 0.6%)는 13.8%에 불과했다. 한편 제3자에 의한 중재나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도 시위 참가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비율은 전면 수용 34.9%, 부분 수용 47.7%,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경우가 2.7%로 총 85.2%에 달했다. 조정이나 중재노력이 없을 경우 시위참가자들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는 비율은 15%(전문수용 5.0%, 부분 수용 9.4%, 수용 약속 0.5%)에 불과하다.

물론 부분수용이나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경우 애초 참가자들의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조정이나 협상을 시도하지 않은 경우 전혀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비율이 85%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정 혹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이면서도 바람직하리라고 판단된다.

협상과 조정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배척받은 이유는 무엇보다 정치사회적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신뢰가 무너진 이유가 크다. 신뢰가 무너진 조건에서 상대의 이익은 나의 손해라는 제로섬적 사고가 팽배해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만을 주고 받다 실력행사로 들어갔던 것이 그 간의 모습이다.

상호불신으로 인해 서로 배신해서 결과적으로 최악의 선택을 반복하는 것은 민주화 20년을 맞이한 한국 민주주의로서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최악보다 차선을 택하는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

[그림13] 조정 및 협상시도 비율(%)(1988-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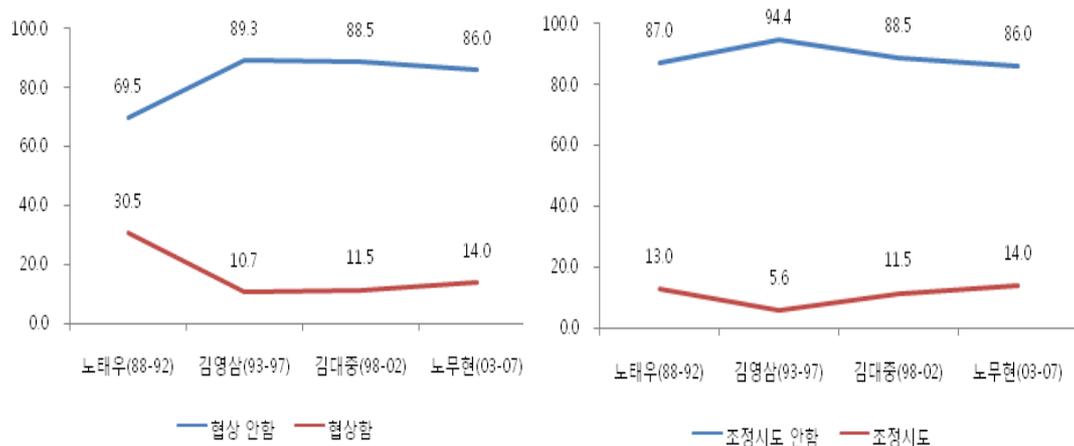


주: 협상 여부(case=2375), 조정 여부(case=2224)

[그림14] 정권별 협상 및 조정 시도 (%) (1988-2007)

(1) 정권별 시위 중 협상 비율(case=2375)

(2) 정권별 시위 중 조정 비율(case=2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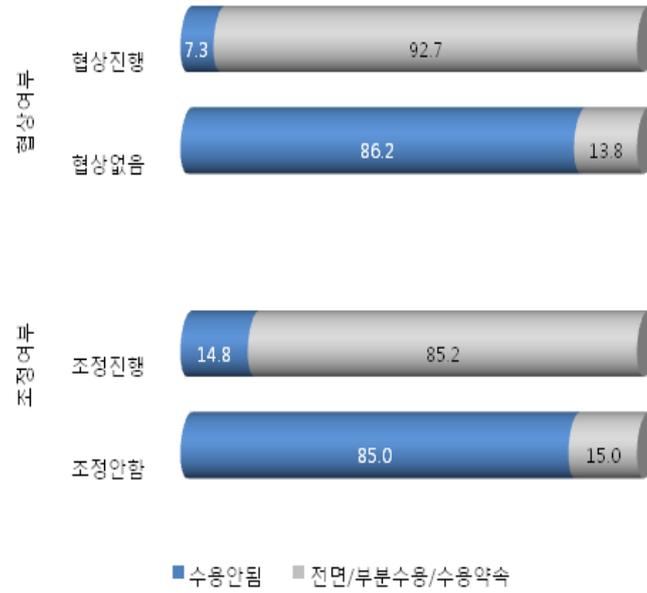


[표3] 조정 및 협상 시 요구 수용율 차이(1988~2007, %)

	수용안함	수용			전체	
		전면수용	부분수용	수용 약속		
조정여부	조정부재	85.0	5.0	9.4	0.5	100
case =1441	조정시도	14.8	34.9	47.7	2.7	100
협상여부	협상부재	86.2	4.6	8.5	0.6	100
case=1539	협상시도	7.3	35.5	52.3	5.0	100.0

[그림 15] 협상 및 조정중재 시 요구수용도 차이(%)(1988-2007)

(1) 협상 여부에 따른 수용도(case=1539) (2) 조정중재여부에 따른 수용도(case=1442)



주제2. 2008 촛불시위와 한국 민주주의

정한울(EAI)

1. 2002년, 2004년 촛불, 그리고 2008년의 촛불

[표7. 촛불집회 비교표 참조]

촛불집회의 키워드 “대규모 축제” “네티즌” “Web2.0 쌍방향적 소통” “생활정치”

Web2.0

지난 5월 2일부터 시작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요구하며 시작된 촛불집회가 두 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시위로 국내 언론은 물론 해외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촛불문화제 초기 여중생, 여고생이 시위 주력부대로 등장하고, 핸드폰·무선 인터넷·웹캠 등 정보기기를 활용한 1인 미디어가 활성화되어 각계각층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부 언론매체와 사회집단이 경쟁적으로 실시간 TV생중계를 진행하면서 네티즌과 일반국민들이 참여하는 쌍방향 소통을 비약적으로 증가시켰다는 성과도 낳았다. 이러한 변화는 상당부분 2002년 여중생 추모 촛불집회와 2004년 탄핵무효 촛불집회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다.

역대 최장기간, 최대 규모 촛불집회

5월 2일부터 두 달여간(7.12일까지) 연인원 55만(주최 측 추산 300만), 심야투쟁 일상화

이번 촛불집회에는 역대 촛불집회와 마찬가지로 과거 운동권이 주도하는 엄숙한 시위행태 대신 달리 대규모 군중이 장기간 참여할 수 있는 축제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집회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군중이 가장 장기간 촛불시위를 지속시켜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5월 2일부터 7월 12일까지 주최 측 추산 2,994,400명(경찰 추산 556,600명)이 참여했다. 특히 2008년에는 72시간 릴레이, 48시간 릴레이 시위처럼 장시간에 걸친 마라톤 시위가 등장하는가 하면 촛불문화제로 시작하여 다음날 새벽까지 경찰과 대치하는 철야새벽시위도 일상화되었다.

2002년 효순이·미순이 여중생 추모 촛불집회의 경우 2002년 11월 시작하여 2003년까지 총 300여 차례에 걸쳐 연인원 500만명이 참여한 사례에는 못 미친다. 2003년 이후에는 이라크 파병 반대 등 다른 이슈들을 포함한 결과이며 ‘미군 처벌·부시대통령 사과·소파개정’이라는 애초의 이슈를 기준으로 하면 12월 31일까지 총 32일간 30여 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4년에는 한나라당·민주당주도로 국회에서 탄핵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을 계기로 ‘탄핵무효·부패척결’을 위한 촛불집회가 3월 12일부터 29일까지 16일간 연인원 150만 명이 참여했다.

대책위는 50만(경찰추산 5만)이 참여한 7월 5일 촛불집회를 기점으로 평일시위를 중단하고 휴일에 집중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첫 주말집회인 12일에는 2만명(경찰추산 3700명)이 참여하는 데 그쳤다. 인터넷이나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촛불시위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연일 촛불시위를 계속하고 있지만 12일 이후에는 200~300명 규모에 그쳤다.

촛불의 전개, 네티즌이 발동 걸고 시민단체/운동단체가 받는다

온라인에서의 광우병 괴담, 이명박 탄핵서명(5/4 100만 돌파)이 촛불의 사회적 분위기 성숙 2008년 촛불집회의 장은 안티이명박카페와 미친소닷넷 등 온라인 단체의 제안과 준비로 시작되었다. 안티이명박카페가 5월 2일 1차 촛불문화제를, 미친소닷넷이 3일 촛불문화제를 제안하고 여기에 각각 1만 명 이상(경찰추산 5000명, 7000명)의 시민이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온라인에서 촛불시위를 제안하여 발동을 걸고, 참여연대 · 진보연대 등 진보적 시민단체가 가세하여 집회를 주관해나가는 전개양상 역시 2002년과 2004년의 경험과 다르지 않다. 2002년 촛불집회의 경우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였던 김기보(ID:양마)가 범대위 게시판에 촛불 집회를 제안했고, 2004년 탄핵시기에는 친노 온라인 단체인 국민의 힘과 노사모가 시작한 촛불집회에 광범위한 시민들이 결집하면서 본격화되었다.

▶ 네티즌의 시민운동단체(정당 및 반미단체)의 거리두기

세 차례 촛불집회를 비교해보면 온라인 공간을 통해 촛불집회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네티즌과 광장에서 시위를 주도하는 시민단체(대책위)간의 관계가 변화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네티즌들은 과거 특정 정치적 성향의 운동단체들이 촛불집회를 주도하거나 순수한 촛불 집회를 ‘변질’시키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보여왔다. 2002년 촛불집회의 경우 네티즌과 반미성향의 여중생범대위 사이의 갈등은 11월 30일 첫 촛불집회에서부터 불거지기 시작하여 2003년 1월 두 개의 촛불집회로 분열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촛불문화제에서 소위 네티즌은 운동단체들이 깃발을 내리라고 것을 요구하거나(깃발논쟁), 권영길 민노당 후보의 연설을 거부하고 운동단체의 ‘주한미군철수’ 구호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당시 범대위나 한총련 등은 주한미군 철수구호를 자제하게 만들었다.

2008년 촛불집회에서는 네티즌의 입장이 더욱 강하게 반영되었다. 초기 촛불집회에서는 운동단체들이 대형깃발 사용을 자제했을 뿐 아니라 촛불행진을 지도하려는 특정 정치단체들은 프락치로 몰리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정세력이 집회의 형식과 방법을 주도하기 어려운 구조가 자리 잡았다. 특히 정당은 조직적 참여가 허용되지 않았고 쇠고기 수입반대운동을 장기간 해온 강기갑 의원을 제외한 정치인은 집회에서 발언권을 제한받았다.

구호에 있어서도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반미시위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네티즌의 우려가 2002년에 이어 2008년에 훨씬 강하게 나타났다. “한국국민은 더 배워야 한다”는 발언 등 쇠고기협상 직후 버시바우 미대사의 돌출발언에도 불구하고 촛불집회의 핵심구호는 주한미군철수나 미국반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2008 촛불집회의 경우 반미로 연결될 수 있는 좋은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한국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표현하는 데 집중해왔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쇠고기협상 직후 정부가 제기한 “반미세력 배후설”은 네티즌들 사이에 퍼져 있는 반미로 변질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정서를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히려 참가자들의 반정부 인식만 확산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이 점에서 보면 외신에서 제기한 한국의 촛불시위가 명목상 광우병 위협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밑바닥에는 반미/반정부 정서가 작용한 결과라는 주장 역시 일면적이라고 볼 수 있다.

각양각색의 계층이 참여하는 축제로 시작, 2008년에는 촛불소녀의 등장

2004년 촛불집회에서 이미 2002년 주목받은 빅타이부대 · 유모차부대 · 가족 및 연인단위 집회 참여가 주목받았고, 2008년 촛불집회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었다. 예전 운동권 주도의 집회에서는 주최 측의 일방적인 주도로 과격한 구호와 투쟁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촛불집회에서는 온라인에서의 사전토론과 준비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위도구(예: 스티커, 유니폼 등)를 스스로 준비하고, 준비된 연사의 정치연설을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대체했다.

특히 대중연예인들의 참여가 촛불집회를 대중화하는 데 한몫 했던 것으로 보인다. 2002년에는 신해철, 윤도현, 김장훈씨 2004년에는 권해효, 문소리 씨가 가세했고, 2008년에는 낯익은 얼굴들 외에도 햄버거 논란을 일으킨 김민선, 하리수 등이 온라인 상에서 미 쇠고기수입에 대해 비판하여 관심을 끌었다. 이승환과 김장훈 등 톱가수들의 참여로 5월 17일 촛불문화제에는 주최측 추산 6만명, 경찰 추산으로도 처음으로 1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하여 촛불집회를 확산시키는데 역할을 했다.

2008년 촛불집회에서 참가집단 중 가장 눈에 띄는 집단은 역시 “촛불소녀”로 상징되는 10대 여중생 · 여고생들이다. 10대 청소년들의 경우 인수위 시기이래 정부가 제시한 교육경쟁심화정책(영어몰입, 특목고 확대, 0교시 수업 허용 등)에 대한 불만이 결집하면서 촛불집회 초기에는 참가자의 50~60%이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이명박탄핵서명 첫 제안자가 안단테라는 아이디의 고2 학생이었을 뿐 아니라 57만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미친소를 몰아내는 10대연합”, “전국청소년연합” 등의 10대 인터넷 카페가 초기 촛불집회의 주력부대 역할을 했다.

생활정치(말물질적 가치에 기반한) 이슈가 참여 폭 확대

참여계층의 확대는 대책위에 가입한 단체 수에서도 확인된다. 2002년 여중생 범대위가 반미성향의 자민통/전국연합/민중연대 등 130여개 시민운동단체가 참여한데, 2004년 탄핵반대 국민행동에는 참여연대, 환경연합 등 550여개 단체가 가입했다. 2008년 광우병 대책위에는 5월 2일 1513개 단체가 가입하였고 7월 6일 현재 1837개 단체로 확대되었다.

2002년, 2004년 촛불집회가 부시 대통령의 사과와 소파개정, 탄핵 무효라는 정치적 이슈를 두고 일어남에 따라 대체로 이념적 성향에 따라 찬반이 나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2008년 촛불집회 초기에는 미 수입쇠고기 안정성 여부와 같은 생활정치적 이슈를 중심으로 촛불집회가 개최되어 ‘icoop생활협동조합’ 등 비정치적 단체들이 대책회의에 대거 가입했다. 주부 카페 ‘U-mom’, 요리커뮤니티 사이트 ‘82cook’ 가입자들이 유모차부대를 이끌고 집회에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2. 국면 별로 본 촛불집회 2008 촛불집회의 전개과정

[그림1] 촛불집회 전개도 [표8] 국면별로 본 촛불집회 특징

2008 촛불집회가 완전히 종료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5월 2일 1차 촛불집회가 개최된 이래 7월 12일까지의 과정을 보면 크게 네 국면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점화기] 5월 2일 ~ 5월 23일 (촛불문화제)

5월 들어 두 인터넷단체가 촛불문화제를 연이어 개최하면서 촛불집회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5월 2일 1차 촛불문화제는 이명박탄핵국민운동본부가, 5월 3일 2차는 미친소닷넷인터넷카페가 개최하여 각각 1만명 이상이 참여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촛불집회가 시작되기 이전 온라인 공간에서는 이미 쇠고기협상결과 및 정부의 졸속처리과정에 대한 비판여론이 조성되어 있었다. 4월 18일 쇠고기협상 타결이후 소위 ‘광우병 괴담’이라 일컬어지는 미쇠고기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4월 초 온라인에서 시작한 이명박 탄핵서명운동이 탄력을 받았다. 4월 29일 10만명을 돌파한 이래 3일 후인 5월 2일 50만, 5월 4일에는 1백만명을 넘어섰다. 4월 29일 방영된 PD수첩이 영향을 미쳤다. 7일부터 시작한 국회청문회에서 정부의 졸속협상과 부실대응이 드러나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촛불집회에 대한 관심을 높였던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인 촛불집회 개최와 효율적 준비를 위해 광우병 대책회위가 결성한 것이 그 즈음(6일)이며 이후 대책회의가 전면재협상을 요구하며 촛불집회를 주관해나가기 시작한다.

초기 촛불집회의 경우 야간시위 금지규정을 피하기 위해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50~60%가 10대 교복부대(소위 촛불소녀)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여기에 유모차 부대와 30대 벅타이부대, 40~50대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동참하고 이승환, 김장훈 등 인기연예인이 문화제에 참석하면서 참여인원이 5월 17일에는 주최측 추산 6만명(경찰추산 1만1천명)까지 불어났다.

3/26	4/18	5/12	5/22
57.4%	44.6%	22.6%	29.3%
중앙	문화	한겨레	민주당

표 1. 대통령 지지율 추이(3월~5월)

이명박 대통령은 5월 2일 “쇠고기협상 논란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데 이어 경찰 역시 “촛불시위는 불법이며 사법처리 방침”을 밝히며 시위확산을 막는 데만 주력했다. 그러나 촛불집회 참가자가 증가하고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22.6%로 까지 떨어

지면서 대통령이 “소통이 부족”(13일),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길 것”(15일), “국민에게 송구”(22일)하다며 자세를 낮추고 15일로 예정되었던 ‘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미루게 되었다.

[절정기] 5월 24일 ~ 6월 10일 : 1차 물리적 충돌과 70만(경찰 8만) 참여한 6·10

정부 및 미국의 재협상 불가입장을 명확히 한 조건에서 5월 24일부터 촛불문화제 이후 가두행진이 시작된다. 정부가 6월 3일 재고시를 예고하자 시위가 점차 격화되기 시작하여 30일부터는 문화제 후 “가자! 청와대로”가 등장했다. 거리행진을 막기 위해 세워둔 전경버스를 훼손하고 밟로 견인하는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 사이의 충돌이 빚어졌다. 5월 31일 첫 물대포 진압이 등장하고, 경찰버스에 올라탄 시위대를 해산하는 과정에 경찰특공대가 투입된 후 물리적 충돌이 격화되었다.

정부에 대한 불신 광범위한 상태에서 정부가 강경대응에 나서자 국민여론은 시위대 보다는

문화일보	6/5	6/11
촛불계속	64.5%	58.2%
촛불자제	31.1%	36.5%

표 2. 촛불집회에 대한 여론(6월 초)

정부를 타하는 여론이 확산되었다. 6월 초 여론조사에서 촛불집회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60% 전후에 달했다. 특히 서울대 여대생이 전경에게 구타당하는 장면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면서 정부의 강경대응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되었다. 이 시기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10%대로 추락한다.

5/31	6/5	6/9
19.7%	16.9%	20.1%
중앙	문화	중앙

표 3. 대통령 지지도(6월 초)

6월 4일 재보선을 앞둔 한나라당에서 정부 대응에 문제제기를 시작한 것이 바로 이때이다. 6월 2일에는 6월 3일 예정된 고시게재를 다시 연기하고, 경찰은 시위대에 대한 진압대신 온건대응으로 선회했다. 이로써 일단 정부와 시위대 사이의 물리적 충돌은 잦아들었다. 촛불집회는 6월 5일부터 8일까지 72시간 릴레이집회에 이어 6월 10일에는 주최 측 추산 70만(경찰추산 8만)의 최대군중이 운집함으로써 촛불집회의 절정에 달했다.

간 릴레이집회에 이어 6월 10일에는 주최 측 추산 70만(경찰추산 8만)의 최대군중이 운집함으로써 촛불집회의 절정에 달했다.

[변환기] 6월 11일 ~ 6월 29일 : 5대 정치이슈로 전환과 관보게재 후 2차 충돌

정부는 쇠고기협상국면을 진정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협상을 통해 민심을 안정시킨다는 전략으로 6월 13일부터 19일까지 미국과 추가협상을 진행하여 △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 △ 광우병 위험 우려 있는 4개 부위 수입금지 △ 한국정부의 검역주권 강화 등을 이끌어냈다.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쇠고기 파동에 빠져리게 반성”한다고 발표하고 20일에는 청와대 비서실장 및 수석 8인 중 7인의 교체를 단행하였다. 6월 25일에는 그 동안 미루었던 추가협상 결과를 토대로 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보게재를 관철시켰다.

	6/20	6/29	7/5
촛불계속	31.1%	35.2%	30.7%
자제/중단	58.2%	59.9%	65.7%
언론사	중앙선데이	KBS	한겨레

표 4. 촛불집회에 대한 여론(6월 말)

6월 10일 이후 열흘 동안 촛불집회에 대한 여론이 반전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은 20% 초반대에 머물렀지만 촛불집회를 중단(자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60% 전후로 올라갔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위대의 규모도 14일 이후에는 500~1000명 규모로 급감함으로써 촛불정국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추가협상 결과가 기대보다 좋았고, 오랫동안 지속된 촛불집회에 대한 피로도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광우병 대책위와 강경노선의 온라인 단체들을 중심으로 쇠고기재협상 문제에서 5대 정치사회이슈(△ 공영방송 장악기도 반대 △ 대운하 건설 반대 △ 의료 민영화 반대 △ 교육 자율화 반대 △ 공기업 민영화 반대)로 확대하려는 시도도 촛불 참가자들의 감소를 가져온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생활정치 이슈에서 출발한 촛불집회가 정치화되면서 일반참가자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줄기 시작한 것이다.

촛불집회의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조건에서 6월 25일 관보게재가 강행되자 온라인 및 기존 시민운동단체 소속 참가자를 중심으로 한 강경노선이 주류로 등장했다. 정부 역시 이에 6월 1일 이후 사라졌던 물대포가 25일만에 다시 등장했다. 물리적 충돌이 격화되면서 “비폭력 하려면 집에 가라”는 큰 목소리에 촛불 본연의 비폭력 노선을 주장한 시민의 목소리는 묻혔다. 소위 ‘깃발’이 ‘촛불’을 대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쇠퇴기] 6월 30일 ~ 7월 12일 촛불집회 정당성 위기와 명예회복...이후 소모전 가능성

빠져린 반성을 얘기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6월 25일 관보게재를 앞두고 “국가정체성을 위협하는 세력은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4일). 29일 검찰도 “폭력시위 연루자는 철저히 색출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촛불집회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초동진압에 나섰다. 이러한 태도변화는 여전히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이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진정성에 대한 의혹을 사면서 역풍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5월 말 정부의 강경대처에 대해 수십만 군중이 참여하는 촛불집회를 통해 대통령의 사과성명을 이끌어냈던 것과 달리 촛불집회는 자체의 자정능력과 정국 주도력을 상실하게 된다. 오히려 촛불집회 중단 여론이 고조되고 자체 토론을 통해 촛불 본연의 비폭력노선으로 복귀하는 것도 여의치 않게 된 것. 쇠고기 정국의 촉발제가 되었던 PD수첩 취재과정에서 정보의 왜곡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것도 촛불시위 자체의 정당성 위기를 가속화했다.

6월 30일~7월 2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주재한 시국미사, 3일과 4일 개신교와 불교계가 촛불집회에 가세하면서 7월 5일 6.10 이래 최대 인파를 동원(주최 측 50만, 경찰추산 5만)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는 촛불집회의 정당성 회복이라는 일종의 명예회복 차원이자 할 수 있다. 수배 받은 대책회의 간부 6인이 7월 5일 집회 후 조계사로 피신농성에 들어간 것은 두 달여간 지속된 촛불집회가 기존 방식으로 유지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대책회의는 평일 촛불집회를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 후 12일, 17일 촛불집회에 주최 측 추산 각 2만(12일 경찰 추산 3700명, 17일 3000명)이 집회에 참석하는 데 그쳤다.

이미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시판이 재개되고 촛불집회에 대한 종단을 바라는 국민 여론이 높다는 점에서 촛불집회가 이전의 군중참여를 다시 이끌어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쇠퇴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강경대응 방식 역시 반감을 사고 있다. 결국 촛불이 급격하게 꺼지거나 되살아나기 보다는 정부와 시위대 간의 공방 속에서 소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3. 촛불집회의 교훈

• 정부의 조기 진화는 불가능했으나, 두 달여간 광범위한 대중이 참여했다?
정부, 괴담론과 배후설만으로 정국돌파 어려워, 정부신뢰 회복이 관건

• 괴담(루머)은 불신을 먹고 자란다

최근 촛불집회를 촉발시킨 “PD수첩”방송분이나 인터넷에서 횡횡한 괴담(초기 광우병 괴담: 물과 공기를 통해 전염, → 정부폭력진압과 관련한 괴담 : 여성 시위대 성폭행설, 질식사설) 이 초기 촛불 시위대의 확산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성명에서 스스로 인정했듯이 정부 스스로의 소통 부족과 졸속협상의 책임, 사후 해결과정에서의 미숙 등으로 국민들과 시위대의 불신을 스스로 자초한 측면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 정부 스스로 정부 불신을 자초했다.

현재 국민들의 정부불신은 (1) 인수위 활동과 인사파동 (2) 총선 전후 배제의 정치 (3) 국민 생명과 주권의 경시 (4) 실력 없는 정부라는 인식 (5) 오락가락 정책, 진정성에 대한 우려 차원으로 구성된다. 인수위 때부터 시작된 고집스러운 인사스타일로 중산층과 서민들의 괴리감이 심화되고, 총선 전후 공천과정에서 다수 탈당파를 양산했다. 초기 70-80%대의 높은 지지율이 급락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다. 그 결과 총선 직전에는 한 때 과반수 의석이 위협받기도 했다.

• 특히 초기 대응에 문제가 많았다.

실제 촛불집회로 많은 국민들의 불만이 본격적으로 표출한 데에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쇠고기수입조건 협상을 졸속으로 서두름으로써 불가침의 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한미동맹과 ‘거래’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더구나 청문회나 TV 토론과정에 나선 정부관계자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심지어 ‘협상합의 내용’에 대한 오역 파동 등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해온 국정능력과 실력에 대한 의문이 증폭된 바 있다.

• 대국민 정책적 대응에 일관성도 없었다.

물론 여론 변화에 맞게 유연하게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관된 법집행 원칙을 천명하면서 일부각료는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대통령의 “빠져린 반성” 회견 직후 공격적인 진압전술로 급선회하는 등 오락가락한 대응은 오히려 법질서 유지도 시위대의 분노를 잠재우는 데도 실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진정성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시위대의 감정적 대응을 더욱 격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

• 정부 신뢰회복이 촛불을 끄는 근본적 해결책

현재 촛불집회를 중단, 자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6월 20일(중앙선데이) 다수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우려는 가라앉지 않았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국정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전의 정국주도력을 갖기는 힘들겠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이 촛불집회를 유지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하는 한 정부에 대한 신뢰회복만이 촛불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각계의 비판을 국정운영에 반영하여 새로운 신뢰기반을 구축하는 데 힘쓸 때이다.

▶ 대의제의 위기와 정부-국민 갈등 첨예화

- 대의제의 위기, 신뢰의 위기
- 국회와 정당, 조정과 타협의 중재역할 할 수 없어

대의제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두 달간 촛불집회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정부는 직접 대결을 펼쳐왔다. 시민사회와 국가 사이의 매개자이자 완충막이 되어야 할 국회와 정당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국회와 정치권이 다양한 시민사회의 요구와 갈등을 대변하여 제도적으로 조정 해결하는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시민사회가 대통령과 정부와 직접대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EAI가 2004년, 2008년에 실시한 기관별 신뢰도 조사와 2001년 서울대 조사 결과를 보면, 국회의 경우 조사대상 11개 기관 중 최하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 주요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평가를 봐도 마찬가지이다. EAI가 중앙일보와 함께 매년 조사해온 파워기관 신뢰영향력조사 결과를 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한나라당을 제외한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이 조사대상 기관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왔다. 2006년, 2007년에는 10위권에 포함되어 있던 한나라당이 2008년에는 21위로까지 떨어졌다.[표5],[표6]

이렇게 국회와 정당에 대한 국민신뢰가 매우 낮아서 이들이 국가와 시민사회, 혹은 시민사회 내부의 이해관계 충돌을 중재하거나 조정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2008년 촛불집회가 두 달을 넘게 지속되어도 이들이 전혀 정부와 국민사이의 갈등을 완화시키고 제도적으로 해소하기위한 중재에 나서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신뢰받는 조정자 및 완충자가 없는 조건에서 양 집단 사이의 갈등은 첨예하게 장기화되기 십상이다.

[표5] 기관별 신뢰도 점수 순위(2001~2007)

2001년(서울대)		2004년(EAI)		2008년 1월(EAI)	
1	시민단체	1	시민단체	1	시민단체
2	교육단체	2	대학	2	대학
3	군	3	대기업	3	대통령
4	종교단체	4	종교단체	4	종교단체
5	노동조합	5	노동조합	5	군
6	대통령	6	군	6	언론기관
7	언론기관	7	언론기관	7	대기업
8	사법부	8	대통령	8	사법부
9	정부	9	사법부	9	노동조합
10	대기업	10	정부	10	정부
11	국회	11	국회	11	국회

EAI 사회신뢰조사(2004, 2008),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2002)

[표6] 주요정당 신뢰도 순위(2006~2008)

2008		2007		2006	
1	현대차	1	삼성	1	현대차
2	SK	2	현대차	2	삼성
3	LG	3	Sk	3	SK
4	삼성	4	헌법재판소	:	:
:	:	:	:	13	한나라당
21	한나라당	15	한나라당	:	:
22	통합민주당	:	:	20	민주당
23	뉴라이트	23	민주노동당	21	민주노동당
24	민주노동당	24	민주당	:	:
25	자유선진당	25	열린우리당	24	열린우리당

EAI · 중앙일보 파워기관 신뢰영향력조사(2006~2008)

← **촛불과 민주주의**

촛불이 보여준 집단지성의 한계 : 리더십의 공백

• **왜 청와대 행을 고수해야 했나? 불필요한 강경대응 유발**

정부에 대한 불신과 미숙한 대처가 촛불시위를 확산시킨 근본적인 원천이었다고 해도 촛불시위가 진행되면서 촛불시위대의 한계와 문제점도 심화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1차 관보게재 연기(14일)이후 5월 24일 부터는 청계천에서의 문화제 형식을 넘어 가두행진으로 변지고 30일부터는 줄곧 청와대 진출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일상화되었다.

대책위 측에서는 쇠고기 재협상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부에 대해 보다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의지였고, 정부의 강경대응이 폭력사태의 근원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정부권위의 상징이자 최고통치기관이다. 정부로서 심야에 수많은 군중의 청와대 시위를 허용하기는 힘들다. 촛불시위대가 청와대로 진출하려는 시도는 강경대응의 과거 가두투쟁이 일상적으로 열리고 정권퇴진운동이 활발했던 80-90년대조차 청와대 시위를 고려했던 것은 80년 광주, 87년 민주화 시위 등 두 번 정도다. 그나마 스스로 자제했다.

대책회의 지도부가 정부의 강경대응과 시위대의 충돌을 통해 사태를 악화시킴으로써 쇠고기 정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해석이다. 대책회의는 정부가 강경대응으로 시위대의 폭력을 유발하여 촛불시위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의도라고 본다. 그 진위는 이후 재판과정에서 보다 분명해지겠지만, 지도부건 네티즌 그룹이건 청와대 진출을 고집할 경우 정부의 강경대응은 불가피하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했어야 했다.

• **국민여론을 왜 외면했나? 촛불자제 여론의 확산, 시위행태는 오히려 과격해져**

6월 20일 추가협상에 자신감을 얻은 정부가 촛불시위대가 요구한 재협상 대신 관보게재를 추진함에 따라 6·10 대규모 촛불문화제 이후 동력을 잃어가던 촛불참가자들이 급격하게 폭

력적 시위방식에 휩쓸리게 된다. 이 시기 일부 참가자들의 비폭력노선 고수를 외쳤지만, 시위대의 주류정서는 폭력시위 노선으로 쏠렸다. 이에 동조하지 않은 많은 시위대들이 이 때 이탈하고 종교계의 시국미사 전까지 시위대가 급감하게 되었다.

6월 20일 이후 촛불시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57~58%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위참가자들은 이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촛불동력을 상당부분 상실하게 된다. 스스로 폭력노선의 철회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종교계가 다시 구원투수로 등장하여 비폭력노선으로 복귀시키는 선에서 마무리하게 된 것이다. 시민의 참여가 급감하고 정부의 강경대응이 거세지자 그 동안 스스로 거리를 두었던 민주당 등 제도권 정당의 참여를 요청하는 상황으로까지 물리게 된 것이다.

• 자율결정의 한계 : 리더십의 공백과 배타성

네티즌 사이에 운동단체나 정치세력이 촛불문화제를 좌우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동시에 온라인 혹은 현장에서의 토론을 통해 그 때 그 때 시위양식을 정해가는 것이 직접민주주의의 사례로 미화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점차 그 한계도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첫째, 리더십의 공백이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과 네티즌은 초기에 스스로 정치적 순수성과 비폭력, 자발적 참여 원칙을 지켜나가는 자정능력을 보여 주었다. 정부가 재협상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6.10 이후 정부의 추가협상을 기울여 나름의 결실을 얻은 조건에서 재협상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물론 대책위 주도로 6월 16일 △ 공영방송 사수 △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 대운하 반대 △ 교육자율화 반대 △ 공기업 민영화 반대 등의 정치 사회적 이슈로 확장을 꾀했다. 생활정치 이슈에서 정치적 이슈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경찰 및 보수진영과의 물리적 충돌이 늘어 나면서 자발적인 참가자들의 이탈이 두드러졌다. 시위 방식과 방법 차원에서는 ‘횡단보도 건너기’, ‘1인 청와대 진입’ 등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드는 데는 지성의 힘을 발휘했다.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바뀐 상황에서 촛불집회가 정치적 순수성과 비폭력, 자발적 참여 원칙을 지키면서도 어떻게 대처하고 변화해야 할 지 전혀 대안을 생산하지 못했다.

둘째, 촛불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혹은 동조하지 않는 집단에 대한 배타성과 불관용으로 스스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제한했다는 점이다. 특히 6.10 행사장을 찾은 정운천 전장관의 발언을 막은 것은 촛불 스스로도 정부와의 소통 의사가 없음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다. 당시 촛불집회에 동조하는 집단 내에서의 토론과 쌍방향적 소통은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외 집단(관망 그룹과 반대그룹)에 대해서는 온·오프 공간에서 강한 배타성을 보여주었다. 이번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보여준 집단지성은 동질적 그룹 내에서만 작동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이는 그룹씽킹(group thinking)의 다른 모습이다.

격세지감

- 한국사회 쇠퇴기 수입반대의 역사 “할복” “분신” 결사반대에서 “재협상으로”
- 한국 축산농가 입장과 대책 논의는 묻혀

촛불시위에 집중된 관심에 묻혀 세간의 관심이 되지 않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변화가 있다. 지난 80-90년대를 돌이켜보면 미 쇠고기수입의 문제는 결사반대의 대상이었지 협상의 대상이 아니었다. 미국과의 수입개방 협상 고비마다 수입쇠고기 문제를 둘러싼 물리적 시위와 심지어 할복, 자살 등 격한 투쟁을 야기했다. 대책위의 요구는 안전하지 않은 소고기의 수입을 반대하는 것으로서 재협상을 목표로 잡아 수입자체는 수용하는 입장이다.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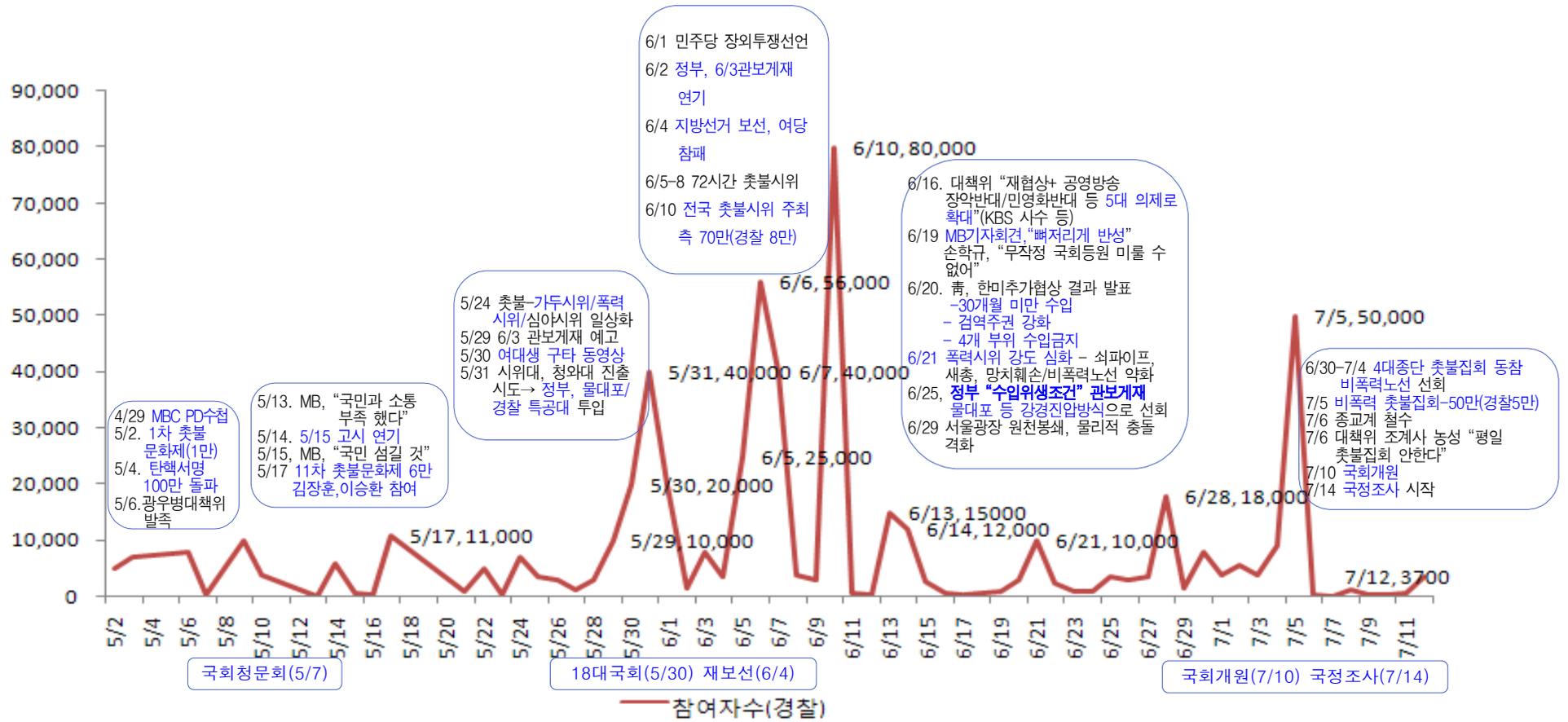
자유무역체제에 편입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모든 계층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피해계층에 대한 충분한 대책과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무이다. 촛불시위 논란 속에서 대표적인 피해집단 중의 하나인 한국 축산농민들에 대한 설득과 대책마련과정이 소홀하지 않았나 되돌아볼 때이다. 정부는 물론 축산농민에 대해 세웠던 대책을 다시 가다듬어 제시해야 하며 시민사회 역시 재협상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축산농민들과 얼마나 소통해왔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표7] 2002년, 2004년, 2008년 촛불집회 비교

	2002년	2004년	2008년				
시 위 방 식	촛불집회(비폭력 평화시위 위주) • 촛불문화제 • 미대사관 인간띠잇기(21, 28, 31일-31일에는 폭력시위)	촛불집회(비폭력 평화시위 위주)	촛불집회 : 비폭력 평화시위와 심야 청와대 진출 폭력시위가 상존 • 촛불문화제(비폭력평화시위) • 가두행진(상황에 따라 변화) • 청와대진출(폭력시위로 이어져)				
대 규 모 촛 불 시 위	11/30~12/7.31 (32일간) • 범국민대책위가 반미경향에 경도되었다고 비판하면서 1월초에는 두 개의 소규모 촛불집회가 별도로 개최됨(1/4) • 범대위 촛불집회는 2004년까지 이어져	3/12~3/ 29 (16일간) • 지도부 4.15총선 공식선거운동 4.2일 이전 촛불집회 종결	2008.5/2~ 7/12(66차) • 대책위 7.6 이후 평일에는 촛불집회 열지 않기로 결정 • 7/5 집회 이후 시위규모 급감 • 7/12 이후 다른 이슈(독도/공기업 사유화 반대 등) 산발적 도심시위 혹은 소규모 촛불시위로 변화				
시 위 주 도	『美軍장갑차故신호순·심미선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2002/6/26) •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중연대, 전교조, 전국연합, 소파개정국민행동 등 130여개 시민단체(반미성향 단체 위주) • 6월부터 시위 주도를 주도해온 여중생 범대위와 촛불문화제 주도한 네티즌간의 갈등 내재(미대사관 포위시위 전후로 깃발과 네티즌의 갈등 심화)	『탄핵무효부패정치척결을 위한 범국민행동』 (2004/3/17) • 참여연대/민주노총/환경연합/민중연대 등 550여개 시민단체 • 노사모/국민의 힘 등 인터넷 단체는 대통령 개입 의혹 제기를 우려해 가입하지 않음 • 초기 국민의 힘/노사모 등 온라인 단체가 3.12 탄핵통과 이전까지의 집회를 주도 → 탄핵이후 범국민행동에 시위 관련 사항 이양(깃발과 네티즌의 공존)	『광우병위험쇠고기 전면수입개방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2008/5/6) • 이명박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미친소닷컴, 정책반대시민연대, 참여연대, 민주노총, 민노당, 진보신당 등 • 1513개(5.6)→1837개(7.6) • 집회초반부터 네티즌 단체가 시위주도하고 범대위는 실무집행기구 역할 • 깃발배제→ 시민참여 줄고 시민/운동단체 주도 → 종교계 주도로 비폭력시위로 전환				
참 가 인 원	연인원 30만 명(한 달 간)	연인원 150만 명(동아일보 3.27) • 3.27 서울 8만(경찰 3만 5천) • 3.20 서울20만(경찰 17만) • 3.14 서울 5만	• 서울광장 촛불시위(5/2~7/12)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주최 측</td> <td>경찰추산</td> </tr> <tr> <td>2,994,400</td> <td>556,600</td> </tr> </table> • 전국 촛불시위 1707회, 770,000명 참여(경찰 7/18 자료) • 경찰부상자 중상 95명 포함 464명, 경찰버스 170대 파손(경찰 7/18 자료) • 연행자 수 968명, 9명 구속, 749명 불구속입건, 56명 즉심, 25명 훈방(7월1일 현재) • 연행자 수 1004명, 13명 구속, 898명 불구속입건, 56명 즉심, 26명 훈방조치(7월 19일 현재)	주최 측	경찰추산	2,994,400	556,600
주최 측	경찰추산						
2,994,400	556,600						
목 표	범대위 공식 목표(정치이슈) • 진상규명 • 살인미군 처벌 • 부시대통령 사과 • 소파개정	범국민행동(정치이슈) • 탄핵 무효 • 부패척결 • 민주주의 수호	생활이슈에서→사회·경제·정치이슈 쇠고기수입 재협상(생활이슈) → 5대 추가이슈(사회이슈)→MB퇴진 • 공영방송 사수 • 대운하 반대 • 의료민영화 반대 • 교육자율화 반대				

			• 공기업 민영화 반대
전 개	온라인 네티즌(단체) 주도 → 기존 시민운동단체가 주도하는 대책위 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김기보씨 (ID : 양마) 대책위 게시판에 촛불시위 제안 • 11/30 1차 문화제 3,000여명 (주최 10,000명)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힘(필명: 미키루크)/노사모 등 온라인 단체가 초기 촛불 집회 주도 • 3/7 여의도 집회 170명 • 3/12 여의도 3만(경찰 1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카페 이명박탄핵국민운동본부(1차)와 미친소닷컴(2차) 등 인터넷 카페가 초기 촛불집회 - 1차 5/2 10,000(경찰 5,000명) - 2차 5/2 15,000(경찰 7,000명)
수 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월 19일 대통령선거 노무현대통령의 당선과 반미시위 자체요청 • 부시대통령 간접사과 및 정부의 소파운영 개선 약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 탄핵 주도한 야당(한나라당/민주당)의 참패와 열린우리당 압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 20일 추가협상 타결 발표 • 6/30~7/5 종교계 주도 촛불집회로 비폭력시위 전환 뒤 수습 국면
참 가 자 특 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촛불시위 주역 : 네티즌 등장 안티슬트레이크 올림픽카페→여중생 추모 카페로 전환(정정당당 대한민국 82,000명 회원), 200여개 주한미군 관련 카페 등 • 대학생 절반/직장인/유모차/여중생 등 다양한 계층 참여시위의 모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절반/직장인/유모차/여중생 등 다양한 계층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절반/직장인/유모차/여중생 등 다양한 계층 참여 • 10대 중고생 참여 “촛불소녀” 인터넷 이명박탄핵서명 제안(ID: 안단테고2) 10대 카페 “미친소 몰아내는 10대연합(57만명)”, “전국청소년연합” 등
특 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선쟁점으로 부각 •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집회참석경도 및 소파개정 서약 • 노무현대통령 당선 이후 “반미시위 자제”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진영의 맞불집회 본격 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부 공백으로 시위전략 부재 네티즌 의견과 현장 토론으로 시위 전개-자생성/즉흥성/무정형 • 자유선진당/친박연대 등 보수진영 참여 • 5.24 이후 평화시위 평화적인 촛불문화제와 청와대 행진과정에서의 물리적 충돌 공존 • 네티즌-유화 vs 단체-강경 구도 파괴 - 네티즌 강경단체의 등장
정 부 대 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시위로 규정, 집회는 허용 • 범대위 관계자 집시법 위반 기소 2005년 유죄판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시위로 규정, 집회는 허용 • 2004. 3월 법원, 검찰 체포영장 기각 • 3월 30일 촛불집회 주최8인 자진출두 후 조사 후 최열공동대표 등 6인 약식기소, 2인은 기소유예(1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시위 규정, 허용→진압 • 24일 거리시위 이후 청와대 방어 위한 강경대응(물대포) • 고시/관보게재(6/25) 전후 공세적 대응(불법시위 색출/처벌) • 시위주최자 8인 체포영장 발부(6/27) 2명 검거, 6인 조계사 피신
온 라 인 매 체 역 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쌍방향 소통에 기초한 시위방식의 전형 게시판을 통한 집회일정, 서명, 각종(사이버) 시위 제안, 이슈 및 시위 평가와 토론(쌍방향 소통) • 오마이뉴스 등 인터넷언론 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쌍방향 소통에 기초한 시위방식 정착 • 오마이뉴스 등 인터넷언론 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쌍방향 소통에 기초한 시위방식 정착 • 무선인터넷 이용한 현장 생중계 기존 시민단체/운동조직 시위대 지도 대신 메신저로 역할 전략 • 1인 미디어 확산 참가자들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쌍방향적 정보 유통

[그림1] 2008 촛불집회 전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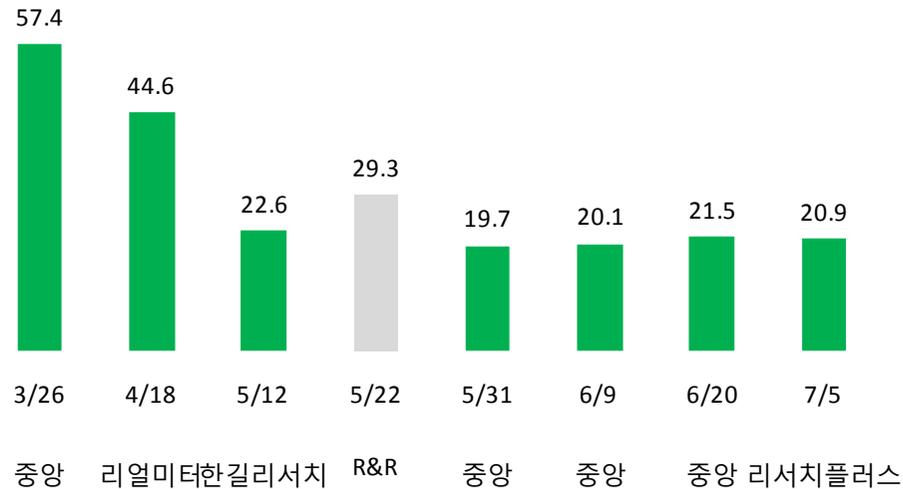


[표8] 2008 촛불집회 국면별 특징

	최고기 협상 반대 시위 점화기	촛불시위 절정기		촛불시위의 주제 및 방식 변화	촛불정국 쇠퇴기																																																	
	온라인 탄핵서명/인터넷카페 주최 촛불시위 촉발 불법(야간)/평화시위(문화제) - 정부의 안일한 대응	촛불문화제+ 거리시위(청와대진출+폭력) 정부의 강경대응		촛불시위대 “재협상 +5대 의제 확대” 정부의 추가협상 및 대응, 촛불시위 중단여론 고조	종교단체 개입으로 비폭력 기조 회복 중단 철수 및 국회정상화로 촛불시위 동력 급강하																																																	
4/18	4/29~5/23	5/24~6/10		6/11~29	6/30~																																																	
시위대/야권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공간이 촛불시위 정국 촉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MB탄핵서명 4/9시작 → 10만(4/29) → 50만(5/2) → 100만(5/4) 1차 촛불문화제(2일-2MB탄핵국민운동본부, 3일-미친소닷넷 주최) 광우병대책위발족(6일 1513개 단체 참여) 정부 불신 심화 - 집권초기 정부정책과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여론(인수위, 강부자내각, 교육 정책)과 미 쇠고기 졸속협상에 대한 비판여론이 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 쇠고기협상 청문회(5/7일 시작) 한미 쇠고기협상 오역 파동(5/9) 비정치적 집단의 촛불시위 주도 및 동참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가 여중/고생 가족단위 참가자 확산 유모차부대/직장인 참여 비운동권학생회 동참 연예인 쇠고기발언 (김민선 하리수 등)/집회참여 (정찬/이승환/김장훈/윤도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촛불시위대 내 강경여론 고조 -비폭력노선 우세 속 폭력시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촛불집회 후 청와대 행진 및 심야 시위 관례화 폭력시위방식(전경차 밟걸던인 등) 등장 정부강경진압에 대한 여론악화- 비폭력노선의 입지 약화 ← 촛불시위 지지여론이 다수 <table border="1"> <tr> <td>문화일보</td> <td>6/5</td> <td>6/11</td> </tr> <tr> <td>촛불계속</td> <td>64.5%</td> <td>58.2%</td> </tr> <tr> <td>촛불자제</td> <td>31.1%</td> <td>36.5%</td> </tr> </table> 시위강도의 고조, 촛불시위의 정치화 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72시간 연속집회 및 6.10대회(70만/경찰 8만) 이명박 퇴진 혹은 탄핵구호 확산 민주당 장외투쟁 (원구성 지원) 참여(6/1) 여대생 구타 동영상 유포 후 각종 괴담 급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위여성 가장 “경찰이 강간까지 했다네요”(6/2) “시위 여대생 사망설”(6/2) 전경가장 “시민놈들 개패뒷 패라 명령”(6/29) 	문화일보	6/5	6/11	촛불계속	64.5%	58.2%	촛불자제	31.1%	36.5%	시위대/야권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6·10이후 전후 정치쟁점화 이후 시위대 급감 촛불의 정치화 : 재협상 + 5대 의제 제기(6/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영 방송 장악 ▶ 대운하 ▶ 의료 민영화 ▶교육 자율화 ▶공기업 민영화 반대 일반 시민 참여 대신 조직시위대 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6.25 관보게재 전후 강경시위노선의 장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폭력할거면 집에 가라” “망치훼손(6/21)/쇠파이프 등 과격시위 방식” 확산 6/21-23 48시간 국민행동 ← 촛불집회 중단여론 고조 <table border="1"> <tr> <td></td> <td>6/20</td> <td>6/29</td> <td>7/5</td> </tr> <tr> <td>촛불계속</td> <td>31.1%</td> <td>35.2%</td> <td>30.7%</td> </tr> <tr> <td>자제/중단</td> <td>58.2%</td> <td>59.9%</td> <td>65.7%</td> </tr> <tr> <td>언론사</td> <td>중앙선데이</td> <td>KBS</td> <td>한겨레</td> </tr> </table> → 보수단체들의 맞대응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수적 시민단체 반발 및 맞불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MBC 편파보도 중단-MBC사수 총돌(6/20) 국정흔들기중단촉구 보수단체“KBS 사장 사퇴”(6/23) 6.25 국가기도회(6/25 서울광장) 등 		6/20	6/29	7/5	촛불계속	31.1%	35.2%	30.7%	자제/중단	58.2%	59.9%	65.7%	언론사	중앙선데이	KBS	한겨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촛불시위 정당성(비폭력) 회복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개신교/불교계 개입 : 비폭력 시위로 복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주교사제단 주관 시국미사(6/30~7/2) 개신교(7/3), 불교(7/4), 국민승리선언 촛불문화제(7/5) 주최 측 50만(경찰추산5만) 참여 대책위 수배자 조계사 농성, 평일 촛불집회 안한다 결정(7/6) 종교계 촛불집회서 철수(7/6) → 대책위, 정치권에 지원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7/5 촛불집회에 야4당 참여 주최 측에서 거리 두던 민주당에 참여 요청 ← 국회정상화, 장외 촛불에 대한 관심 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나라-민주당 “7/10 국회개원합의”(7/9) 미 쇠고기수입관련 국정감사 합의(7/14~) ← 7/5 이후 촛불 참가자 급감, 12일 3700명 수준 <table border="1"> <tr> <td></td> <td>7/6</td> <td>7</td> <td>8</td> <td>9</td> <td>10</td> <td>11</td> <td>12</td> </tr> <tr> <td>주최</td> <td>1000</td> <td>300</td> <td>2000</td> <td>300</td> <td>700</td> <td>2000</td> <td>20000</td> </tr> <tr> <td>경찰</td> <td>500</td> <td>200</td> <td>1200</td> <td>200</td> <td>400</td> <td>800</td> <td>3700</td> </tr> </table> 		7/6	7	8	9	10	11	12	주최	1000	300	2000	300	700	2000	20000	경찰	500	200	1200	200	400	800	3700
문화일보	6/5	6/11																																																				
촛불계속	64.5%	58.2%																																																				
촛불자제	31.1%	36.5%																																																				
	6/20	6/29	7/5																																																			
촛불계속	31.1%	35.2%	30.7%																																																			
자제/중단	58.2%	59.9%	65.7%																																																			
언론사	중앙선데이	KBS	한겨레																																																			
	7/6	7	8	9	10	11	12																																															
주최	1000	300	2000	300	700	2000	20000																																															
경찰	500	200	1200	200	400	800	3700																																															
정부/여당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기 정부대응의 실패 : 안이한 대응 → 역풍불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반성/실질적 대책 없이 촛불시위의 불법성, 비정당성 공격에 치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MB, “쇠고기 논란 바람직 않다”(5/2일) 경찰, “불법집회 사법처리방침”(5/2) 한나라 “반미/반정부세력 배후설”(5/4) 어청수 “촛불시위는 불법, 주최자 사법처리할 것” (5/13) MB 지지율의 추락으로 대응노선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락가락하는 정부대응 강경대응에서...시위대의 6월 3일 관보게재를 앞두고 정부 강경대응 노선으로 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MB, “촛불자금 조사하라”(5/31) 물대포·경찰특공대 투입(5/31) 김경환 법무, “배후 색출할 것”(5/26) 6월 3일 관보게재 예고(5/29) 여대생 구타 사건 발생(5/29→동영상 유포) 온건대응으로 선회 	정부/여당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촛불정국 주도권 회복(혹은 반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5단계 추가협상 타결(6/13~6/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개월 미만 수입/ 4개 부위 수입금지/ 검역주권 강화 靑, 수석 7인 교체(6/20) “소고기 파동 빠져린 반성(6/19)” 6.25 쇠고기 위생조건 고시 관보게재 → 온건대응에서 강경대응으로 재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MB “신뢰 없는 인터넷은 독(6/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이수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햇불론 MB, “촛불대신 경제위한 햇불 들어야” (7/3) “깃발론” 깃발의 촛불대체 촛불시위대 이미 변질 “청, 촛불시위 대신 깃발시위라 부른다”(7/6) ← 촛불 강경대응 기조 고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위주도단체 압수수색/원천봉쇄6일,12일 광우병대책위/참여연대/인터넷 단체 압수수색 																																																	

	<table border="1"> <tr> <td>3/26</td> <td>4/18</td> <td>5/12</td> <td>5/22</td> </tr> <tr> <td>57.4%</td> <td>44.6%</td> <td>22.6%</td> <td>29.3%</td> </tr> <tr> <td>중앙</td> <td>문화</td> <td>한겨레</td> <td>민주당</td> </tr> </table> <p>• 5/15로 예정된 고시 연기(5/14) - MB, "소통부족"(13일), "낮은 자세로 국민 성길 것 (15일)", "국민에 송구"(22일)</p>	3/26	4/18	5/12	5/22	57.4%	44.6%	22.6%	29.3%	중앙	문화	한겨레	민주당	<p>- 6.4 재보궐 선거 전후(한나라당 참패) 무대응 방침으로 재선화- "컨테이너 장벽 설치"</p> <p>• 6월 2일 관보게재 연기</p> <p>• MB 지지를 바닥권</p> <table border="1"> <tr> <td>5/31</td> <td>6/5</td> <td>6/9</td> </tr> <tr> <td>19.7%</td> <td>16.9%</td> <td>20.1%</td> </tr> <tr> <td>중앙</td> <td>문화</td> <td>중앙</td> </tr> </table>	5/31	6/5	6/9	19.7%	16.9%	20.1%	중앙	문화	중앙	<p>• "국가정체성 엄단하는 세력엄단"(6/24)</p> <p>• 물대포 재등장(6/25)</p> <p>• 검찰, MBC PD수첩 수사</p> <p>• 시위주도 8인 수배조치(6/27)</p> <p>• MB 지지율 반등계기 못 찾아</p> <table border="1"> <tr> <td>6/20</td> <td>6/26</td> <td>6/28</td> </tr> <tr> <td>21.5%</td> <td>20.6%</td> <td>20.7%</td> </tr> <tr> <td>중앙</td> <td>한겨레</td> <td>조선</td> </tr> </table>	6/20	6/26	6/28	21.5%	20.6%	20.7%	중앙	한겨레	조선	<p>• 김경한 법무 "폭력시위 연루자 색출"(6/29)</p> <p>• 정부 촛불참가 종교인 처벌 검토(7/7)</p> <p>← 靑, 소록개각(7/7)-농림/교육/보건 3개 부처 교체</p> <p>• MB 지지율 정체</p> <table border="1"> <tr> <td>7/1</td> <td>7/5</td> <td>7/11</td> </tr> <tr> <td>23.8%</td> <td>20.9%</td> <td>24.6%</td> </tr> <tr> <td>문화</td> <td>한겨레</td> <td>CBS</td> </tr> </table>	7/1	7/5	7/11	23.8%	20.9%	24.6%	문화	한겨레	CBS
3/26	4/18	5/12	5/22																																								
57.4%	44.6%	22.6%	29.3%																																								
중앙	문화	한겨레	민주당																																								
5/31	6/5	6/9																																									
19.7%	16.9%	20.1%																																									
중앙	문화	중앙																																									
6/20	6/26	6/28																																									
21.5%	20.6%	20.7%																																									
중앙	한겨레	조선																																									
7/1	7/5	7/11																																									
23.8%	20.9%	24.6%																																									
문화	한겨레	CBS																																									
<p>시위 주요 참가자</p> <p>촛불소녀의 증장여중생/여고생(50~60%) 대학생 직장인 유모차 부대 인터넷 단체-정치적 단체 깃발 배제 지침</p>	<p>대학생 20-30대 시민단체/노동단체(민주노총 · 전교조...)</p>	<p>시위 주요 참가자</p> <p>- 시민단체/운동조직/정당 주도 - 일반시민 참여율 급하락</p>	<p>- 6/30~7/5 : 종교계 주도의 촛불시위로 비폭력 기조 회복함으로써 7/5 촛불집회시 50만(경찰추산 5만) 참여- 일반시민들 참여가 일시적으로 증가 - 7/6 이후 : 촛불집회 참가 규모 급감</p>																																								

[그림2] 3월~6월 이명박 대통령 국정지지도 (매우 잘함 + 약간 잘함) (%)



[부록] 본문 그림의 데이터 표

[그림1] 연도별 시위건수 및 시위장소

연도별 시위건수

년도	시위보도건수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1988	1222	16.4	16.4446
1989	932	12.5	28.9867
1990	577	7.8	36.7514
1991	228	3.1	39.8197
1992	208	2.8	42.6188
1993	246	3.3	45.9292
1994	222	3.0	48.9167
1995	231	3.1	52.0253
1996	374	5.0	57.0583
1997	273	3.7	60.7321
1998	389	5.2	65.9669
1999	454	6.1	72.0764
2000	288	3.9	75.9521
2001	198	2.7	78.6166
2002	355	4.8	83.3939
2003	354	4.8	88.1577
2004	256	3.4	91.6027
2005	238	3.2	94.8055
2006	160	2.2	96.9587
2007	226	3.0	100
Total	7431	100	

연도별 시위장소

연도	중앙정부기관	정당	지방정부기관	기업체	시민단체실내	거리/도로 등	Total
1988	6.6	5.2	6.0	33.3	7.0	42.0	100
1989	2.9	4.9	4.0	21.1	7.2	60.0	100
1990	3.5	5.6	2.8	16.7	3.2	68.3	100
1991	8.6	4.9	6.2	25.3	6.8	48.1	100
1992	17.2	7.6	6.4	16.6	3.8	48.4	100
1993	10.9	3.8	2.7	18.5	8.2	56.0	100
1994	5.7	2.9	4.0	23.0	2.9	61.5	100
1995	3.5	7.0	13.2	37.7	0.9	37.7	100
1996	20.8	2.3	10.4	18.1	8.9	39.4	100
1997	19.0	1.7	6.9	21.8	5.2	45.4	100
1998	25.7	11.2	2.7	25.7	2.1	32.6	100.0
1999	35.3	5.0	2.5	17.0	7.1	33.2	100
2000	2.0	5.6	2.8	19.3	57.4	12.9	100
2001	8.1	4.0	3.5	12.7	55.5	16.2	100
2002	7.4	3.1	5.2	7.7	3.7	72.8	100
2003	3.0	2.7	2.7	7.4	1.8	82.5	100
2004	6.5	1.6	3.2	16.9	3.2	68.5	100
2005	4.5		3.5	17.7	2.5	71.7	100
2006	16.8	4.0	6.4	12.0	10.4	50.4	100
2007	2.2	1.7	2.2	6.1	0.6	87.2	100
계	8.8	4.4	4.7	20.9	9.2	52.1	100

[그림2] 정권별 시위장소

case=5529	중앙정부기관	정당	지방정부기관	기업체	시민단체등 실내	거리/도로 등	총계
노태우(88-92)	5.8	5.3	4.8	24.9	6.1	53.1	100.0
김영삼(93-97)	13.4	3.2	7.3	22.3	5.9	48.0	100.0
김대중(98-02)	15.0	5.5	3.5	15.7	23.2	37.2	100.0

노무현(03-07) 5.4 2.0 3.3 11.1 3.0 75.2 100.0

[그림3] 1988~2007 집회시위 주요 참가자

구분	생산직	사무/관리직	공공부문	청년/학생	농/어/축산업	소수자	지역/소비자	직업적 시민운동가
case=6533								
1988~2007	22.9	25.1	5.6	20.4	4.8	5.1	12.8	3.3

[그림4] 정권별 시위주도층 구성변화(%)

분류 전

	단 노동 자	순 노동	광 광 종 자	부 부 종 자	중 중 종 자	공 공 종 자	경 경 종 자	공 공 종 자	농 농 종 자	부 부 종 자	서 서 종 자	비 비 종 자	공 공 종 자	기 기 종 자	보 보 종 자	교 교 종 자	문 문 종 자	운 운 종 자	언 언 종 자	공 공 종 자	무 무 종 자	경 경 종 자	고 고 종 자	용 용 종 자	실 실 종 자	업 업 종 자	
노태우(88-92)	5.8	0.6	3.7	2.3	3	1.7	1.4	1.6	9.2	1.5	3	6.4	0.7	0.5	0.2	0.3											
김영삼(93-97)	3.9	0.4	4	1.1	2.1	2.3	1.9	2.3	7.3	0.9	1.7	2.5	1.5	0.3	0.3	0											
김대중(98-02)	6.9	0.1	7.5	6.8	1.9	3.1	2.1	2.4	6.1	1.1	2.3	2.6	2.3	0.1	0.1	0.2											
노무현(03-07)	5.2	0	3.8	0.8	1.9	3.4	1	1.7	7.1	2.2	2.8	2.9	4.8	0.5	0.6	0.4											
빈도	521	33	437	269	219	230	148	182	717	132	236	378	187	32	24	20											
비율	5.6	0.4	4.7	2.9	2.3	2.5	1.6	2	7.7	1.4	2.5	4.1	2	0.3	0.3	0.2											
	퇴 퇴 종 자	여 여 성	청 청 년 / 학 학 생	소 소 수 민 민 중 중	소 소 수 종 종 교	주 주 민 민 / 지 지 역 조 조 직	기 기 타	축 축 산	어 어 부 부 / 수 수 업	초 초 가 가 업	국 국 내 내 기업	국 국 외 외 기업	외 외 국 국 인 인 동 동 자	소 소 비 비 자	직 직 업 업 민 민 운 운 동 동 가	자 자 료 료 없 없 음	총 총 계										
	0.4	0.9	22.9	0.1	0.2	5.5	22.1	0.3	0.7	0.2	4.7	0	0	0.1	0	0	37.6										
	0.4	2.1	14.7	0.1	0.1	17	30.7	0.1	1	0.1	0.4	0	0.4	0.5	0	0	19.9										
	1	2.2	6	0.1	0.3	5	35.9	0.6	0.7	0.1	1.6	0	0.7	0.4	0	0	24.4										
	1.9	1.9	7.1	0.2	0.9	11.2	21.9	0.4	0.2	0.1	0.9	0.1	1	0.3	12.8	0	18.2										
	78	152	1330	8	32	812	2528	34	63	12	225	1	41	24	218	0	9323										
	0.8	1.6	14.3	0.1	0.3	8.7	27.1	0.4	0.7	0.1	2.4	0	0.4	0.3	2.3	0	100										

* 자료 없음 236샘플을 제외하고 계산

분류 후

	생산직	사무/관리직	공공부문 종사자	청년/학생	농/어/축산	소수자	지역/소비자	직업적 시민운동가	총계
노태우(88-92)	21.2	28.0	3.6	31.5	5.5	2.6	7.7	0.0	100.0
김영삼(93-97)	16.2	22.3	5.4	21.4	4.7	4.5	25.5	0.0	100.0
김대중(98-02)	37.8	24.5	7.2	9.6	5.1	7.2	8.6	0.0	100.0
노무현(03-07)	16.5	22.6	8.2	9.3	3.3	8.2	15.1	16.8	100.0
비율	22.9	25.1	5.6	20.4	4.8	5.1	12.8	3.3	100.0
빈도	1496	1639	367	1330	316	331	836	218	6533

분류표 : 직업군 분류표

생산직	단순	중공	경공	운송
사무/전문	서비스	보건복지	교육과학	문화예술
공공부문	공무원	군경	공기업종사자	
농축산어업	농부	수산업	축산업	
소수자	실업자	여성	장애인	퇴직자
청년학생				
주민/소비자	주민	소비자		
직업적 운동가				
기타(분석제외)	기타			

[그림5] 집회시위 주요 주도 단체별 요구사항

빈도	물질적 보상	경제정책 변화 및		경제 일반/추상적	특정 정치적 정책	총계
		경제정책 책임	정치적 책임			
		요구	요구(사퇴)	요구	반대	
노동조합	476	196	359	206	376	1613
전문직단체	9	19	156	5	139	328
청년학생	16	36	179	24	145	400
지역운동단체	14	15	32	7	58	126

백분율	물질적 보상	경제정책 변화 및		경제 일반/추상적	특정 정치적 정책	총계
		경제정책 책임	정치적 책임			
		요구	요구(사퇴)	요구	반대	
노동조합	29.5	12.2	22.3	12.8	23.3	
전문직단체	2.7	5.8	47.6	1.5	42.4	
청년학생	4.0	9.0	44.8	6.0	36.3	
지역운동단체	11.1	11.9	25.4	5.6	46.0	

[그림6] 1989~2007 집회시위 대상

연도	대통령	국회와 정당	행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단체	기업경영진	외국정부와 국제기관
1989년	6.4	2.4	34.9	4.4	8.7	22.6	2.3
1990년	7.2	5.1	29.5	1.9	2.8	24.5	5.3
1991년	6.8	5.6	34.7	3.8	13	18.2	0.6
1992년	1.5	9.2	30.8	5.9	9.5	17.2	0.7
1993년	6.6	11.4	45.5	2.4	5.5	14.8	7.6
1994년	4.8	9.7	39.4	5.5	6.6	17.7	5.9
1995년	3.8	15	29.7	9.6	10.2	17.2	4.5
1996년	8.5	5.4	36.9	4.8	3.2	14.1	4.3
1997년	7.8	14	33.5	4.9	5.8	12.4	5.1
1998년	7	11.1	42.2	3.6	4.9	14.3	3.2
1999년	7.9	8.4	47.9	3.1	5.3	11.8	3.5
2000년	0.3	21.8	39.9	2.8	5.8	13.9	0.6
2001년	0	33.1	40.6	1.8	3.5	7.5	0
2002년	2.5	22.6	34.6	7.5	6.8	3.6	15.5
2003년	4.1	21.1	37.4	10.2	6.9	4.1	10.4
2004년	5	19.3	30.1	6.2	13	8.7	3.1
2005년	3.8	9.8	32.8	9.1	3.4	21.5	0
2006년	8.7	10.5	30.2	9.9	5.2	13.4	7
2007년	3.5	13.1	30.1	9.7	8.1	17.4	4.6

[그림7] 시위 규모와 지속성

정권별 시위 지속기간

case = 4018	지속기간			Total
	1일 이하	2일~일주일	일주일 초과	
노태우(88-92)	72.0	13.9	14.1	100
김영삼(93-97)	64.2	10.2	25.6	100
김대중(98-02)	88.5	6.7	4.7	100
노무현(03-07)	72.0	12.1	15.9	100
	74.9	10.9	14.3	100

정권별 시위 규모

case=4270	규모			Total
	200명 이하	200~2000명	2000명 초과	
노태우(88-92)	51.3	36.8	11.9	100
김영삼(93-97)	48.1	36.4	15.5	100
김대중(98-02)	56.0	22.5	21.5	100
노무현(03-07)	58.7	20.8	20.6	100
	52.6	32.0	15.4	100

[그림8] 규모/지속시간에 따른 요구수용률 차이

		수용 안됨	전면/부분수용/수용약속
지속기간	1일 이하	80	20
	2일~일주일	55.9	44.1
	일주일 초과	31.5	68.5
시위규모	200명 이하	72.4	27.6
	200~2000명	62.4	37.6
	2000명 초과	58.7	41.3

정권별 분류

	공권력개입 개입 없음	공권력개입 무력사용 없이 개 입	공권력개입 무력사용으로 개입	Total
				무력사용으로 개입
노태우(88-92)	1437	53	473	1963
	73.2	2.7	24.1	100
김영삼(93-97)	815	29	127	971
	83.9	3.0	13.1	100
김대중(98-02)	703	304	120	1127
	62.4	27.0	10.6	100
노무현(03-07)	775	83	99	957
	81.0	8.7	10.3	100
전체	3730	469	819	5018
	74.3	9.3	16.3	100

[그림9] 정권별 기간, 규모 비중 변화

case=4270 정권분류	case=4270	지속기간			Total
		1일 이하	2일~일주일	일주일 초과	
	노태우(88-92)	72.0	13.9	14.1	100
	김영삼(93-97)	64.2	10.2	25.6	100
	김대중(98-02)	88.5	6.7	4.7	100
	노무현(03-07)	72.0	12.1	15.9	100
Total		74.9	10.9	14.3	100

case=4018 정권분류	case=4018	시위규모			Total
		200명 이하	200~2000명	2000명 초과	
	노태우(88-92)	51.3	36.8	11.9	100
	김영삼(93-97)	48.1	36.4	15.5	100
	김대중(98-02)	56.0	22.5	21.5	100
	노무현(03-07)	58.7	20.8	20.6	100
Total		52.6	32.0	15.4	100

[그림 10] 정권별 불법시위비중 변화

	합법	불법
노태우(88-92)	56.5	43.5
김영삼(93-97)	78.8	21.2
김대중(98-02)	85.1	14.9
노무현(03-07)	77.3	22.7
전체	70.9	29.1

[그림11] 전체 폭력진압율과 불법시위 폭력진압율

정권별	개입 없음	공권력개입 무력사용 없이 개입	무력사용으로 개입	Total 무력사용으로 개입
case=5018				
노태우(88-92)	1437 73.2	53 2.7	473 24.1	1963 100
김영삼(93-97)	815 83.9	29 3.0	127 13.1	971 100
김대중(98-02)	703 62.4	304 27.0	120 10.6	1127 100
노무현(03-07)	775 81.0	83 8.7	99 10.3	957 100
전체	3730 74.3	469 9.3	819 16.3	5018 100

불법시위 시

정권분류	정권분류	개입 없음	공권력개입 무력사용 없이 개입	무력사용으로 개입	Total 무력사용으로 개입
case=3954					
노태우(88-92)	합법시위	97.2	0.9	1.9	100
	불법시위	41.6	2.7	55.8	100
김영삼(93-97)	합법시위	76.6	1.5	21.8	100
	불법시위	97.2	1.1	1.7	100
김대중(03-07)	합법시위	20.6	12.1	67.4	100
	불법시위	85.3	2.8	12.0	100
노무현(03-07)	합법시위	79.9	19.1	1.0	100
	불법시위	18.9	10.0	71.1	100
	합법시위	72.9	18.1	9.0	100
	불법시위	91.5	5.4	3.0	100
	합법시위	45.7	18.8	35.6	100
	불법시위	80.1	8.7	11.1	100

[그림12] 시위형태별 수용율

시위형태	수용 안됨	전면/부분수용/수용약속	요구수용여부 전면수용	부분수용	Total
불법시위	57.6	42.4	12.2	23.7	6.5
합법시위	70.3	28.2	11.2	17.0	1.5

[그림15] 협상/중재 시 요구수용율

조정여부	조정부재	수용 안함	수용 전면수용	수용 부분수용	수용 약속	전체
case =1441						
협상여부	협상부재	85.0	5.0	9.4	0.5	100
	협상시도	14.8	34.9	47.7	2.7	100
case=1539						
협상여부	협상부재	86.2	4.6	8.5	0.6	100
	협상시도	7.3	35.5	52.3	5.0	100.0